
2011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 발췌

2012. 2

국가회계기준센터
국제협력팀



DEPARTMENT OF THE TREASURY
WASHINGTON, D.C.

재무부장관의 메시지

본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다시 한 번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실제 및 추정 적자는 지나치게 높다. 재정적자는 지난 10년간의 세금감면 및 재정지출정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위기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노령화와 의료서비스 원가의 인상으로 확대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개혁을 실시했다. 2013년 초에 실시되는 자동 지출감축과 더불어 재량지출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10년 부채를 2조1천억 달러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전체적인 부채부담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적자감축규모의 절반에 해당한다. 지출삭감과 2001년과 2003년에 제정된 세금감면의 기한이 만료된다는 사실은 2012년 말까지 추가적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개혁은 향후 20년간 노령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제공되는 원가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세제개혁과 계속적으로 복지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한 개혁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국민들이 계획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민들에게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재정적 문제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경제적 도전과제는 아니다. 미국경제는 여전히 금융위기가 야기한 치명적인 타격에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하고 있으나, 성장 속도는 더디다. 보다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민간투자 촉진책, 교육을 개선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과 더불어 효과적인 공공투자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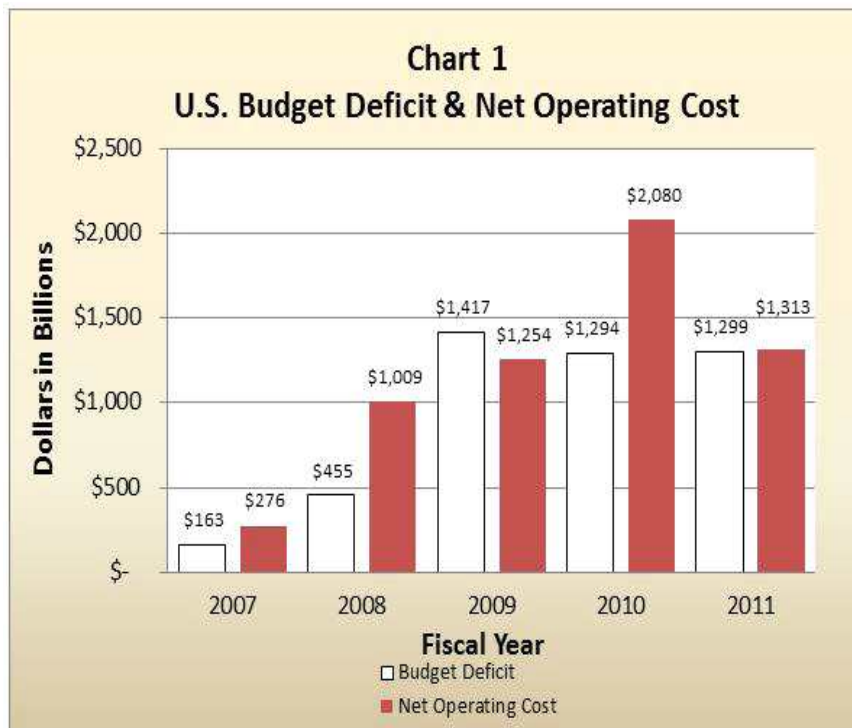
티모시 F. 가이트너

국민을 위한 2011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 안내

개요

국민을 위한 2011 회계연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의 안내서는 미국의 재무상태와 미국 정부의 상황을 제시하고 계속되는 경제회복노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핵심 재무 주제를 설정한다. 본 안내서와 전체 보고서는 미국의 재무부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협력하여 발행한다.

2011 회계연도에 연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거의 동일하게 증가하여 현금기반의 미국 재정적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인 1조3천억 달러를 유지했다. 정부의 순원가가 4조3천억 달러에서 3조7천억 달러로 감소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정부 경제회복 사업의 추정순원가의 감소, 2조2천억 달러에서 2조4천억 달러로 세수의 소폭 증가와 연방공무원 및 퇴직군인 연금의 추정비용의 감소에 기인한다. 순원가 3조7천억 달러와 순수입 2조4천억 달러로 연방정부의 “최종” 순운영원가는 1조3천억 달러가 되었으며, 이는 2010 회계연도 순운영원가 2조1천억 달러와 비교하여 7,680억 달러 혹은 37퍼센트 감소한 수치이다. 다음 “현황”부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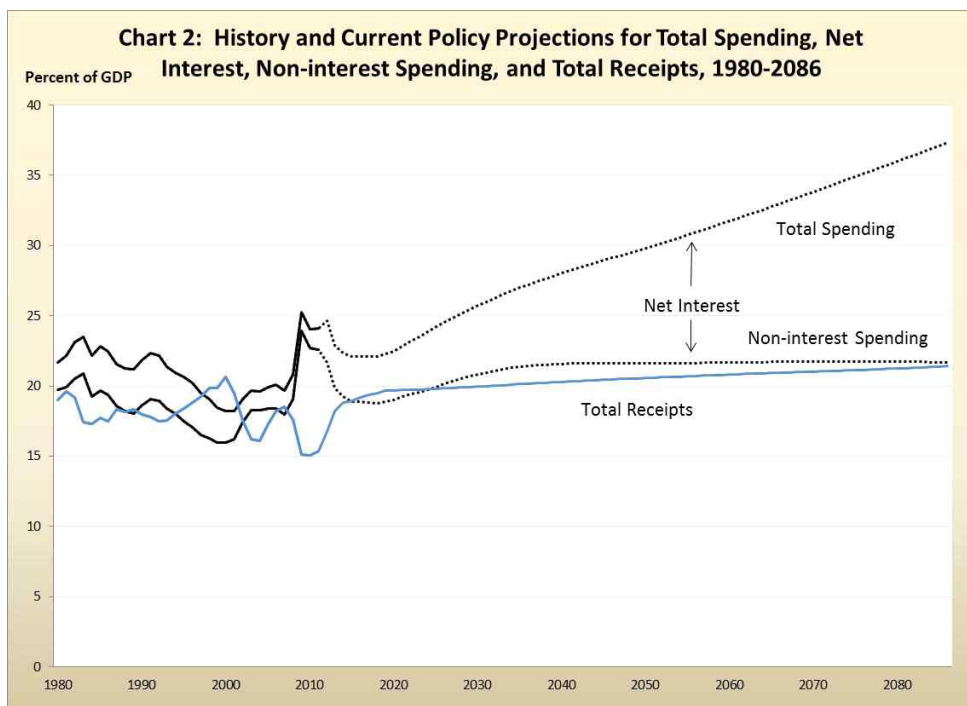


일부 정부정책사업은 지출을 늘리고 징수액을 감소시켜 침체기에 경기부양에 기여하면서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했다. 정책에 있어 법률조문을 변경하지 않고도 실업수당,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지출 증가와 세입의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부양을 “자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동 안정화 장치는 최근 몇 년간 적자와 순운영

원가의 증가를 야기했지만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2011 회계연도에 성장세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되기는 했지만 경제성장은 계속되었다. 2005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주택건설이 증가했으며, 비농업일자리(non-farm payroll jobs)가 1백90만개 증가했다. 2008년 제정된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HERA: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과 긴급경제안정법(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2009년 제정된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포함하여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여러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화, 국가경제의 활성화,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보여준다. 정부와 납세자들은 2011 회계연도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하의 상황과 정부투자자산의 매각에서처럼 이러한 많은 투자로 인한 수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안정화 노력에 대한 검토” 참고

정부가 직면한 당장의 우선순위는 경기회복 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한편,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보다 더 장기적인 재정 문제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인구 고령화, 수명의 증가, 건강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은 특히 고령자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필수적인 사회보장 정책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도표 2에 나타난 수취액과 총지출액의 증가하는 격차는 현재 체제의 정부의 재정정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010년 제정된 건강보험개혁법(ACA)과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BCA: Budget Control Act)과 같은 법안은 정부 지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진행 방향” 참고



본 안내서는 2011년 미국 정부의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주요정보를 조망한다. 재무부장관, 관리예산처장, 미국감사원장은 본 안내서에서 논의된 정보가 모든 미국국민들에게 중요하다고 본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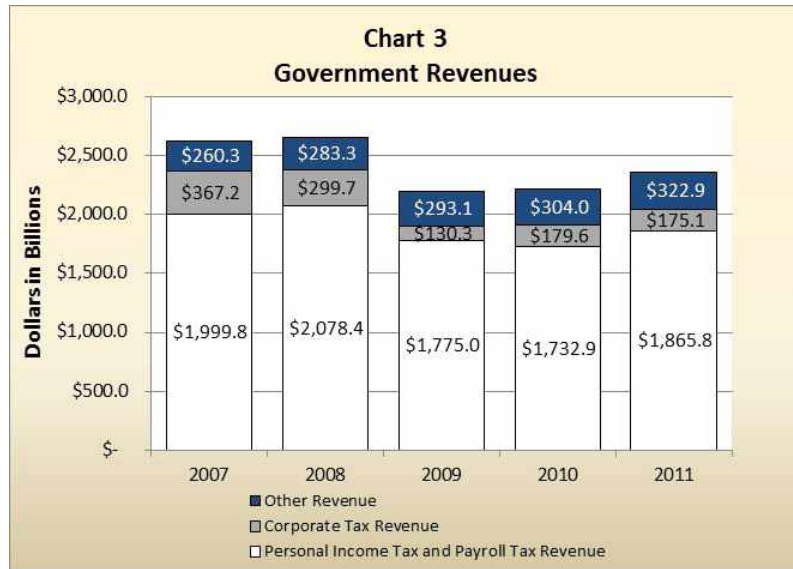
경제

2011 회계연도에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소비자 지출은 더딘 속도로 증가했다. 회계연도 기준의 주택투자는 2005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으며, 비주택투자도 소폭 상승했다. 2011 회계연도에 일자리 창출도 가속화되었다. 민간부문 비농업일자리가 1백 90만개 증가했다. (전기에는 민간부문 농업 외 일자리가 약 35만개 창출되었다.)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가격 인상이 반영되어 당 회계기간동안 물가상승율이 증가하였다. 전 회계연도의 매우 낮은 수준에 비해 핵심물가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 또한 상승했으나, 역사적 기준에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명목임금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동시에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면서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 당 연도 기업의 이익수준은 증가했으나 전기에 비해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당기 연방정부의 세입과 세출도 증가했고, 그 결과 연방정부의 통합재정적자가 1조3천억 달러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GDP 대비 적자의 비율은 2010 회계연도의 9.0퍼센트에서 8.7퍼센트로 감소했다. 2009년 제정된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하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대책으로 인해, 2011 회계연도동안 계속해서 미국경제에 상당한 지원이 있었다. 그 밖에 신설 소기업 일자리 및 임금 세액공제, 일자리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적 지원, 2퍼센트의 근로소득세 감면, 실업급여지급기간의 연장, 상환부 세액공제, 2001년의 세금감면을 2년간 연장한 것 등이 있다.

세입과 세출(들어온 것과 나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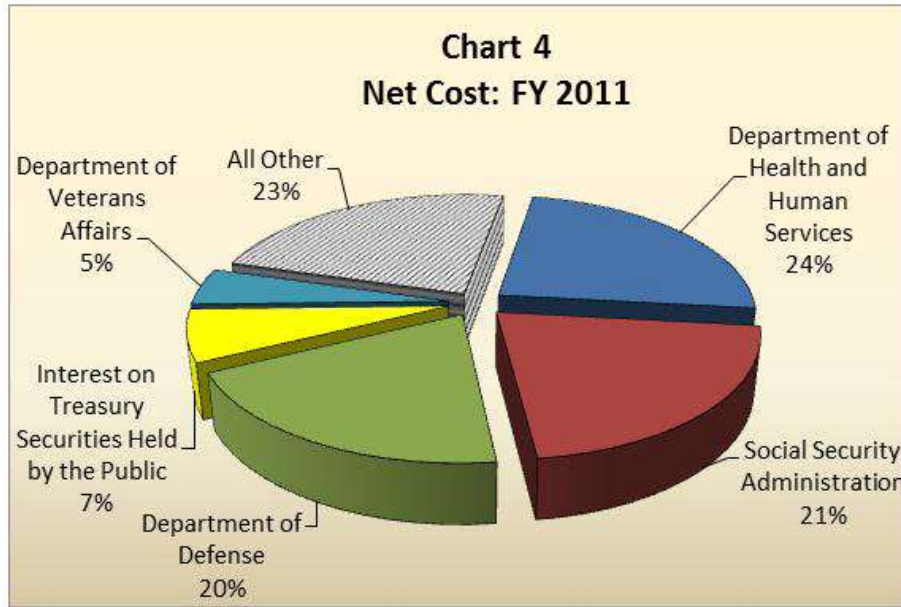
정부에 유입된 것은 무엇인가? 전체 정부수입(수정현금주의회계로 산출)은 2011 회계연도에 2조2천억 달러에서 2조4천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도표3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에 근로소득 및 개인소득세로부터의 수입증가액인 1330억 달러(7.7 퍼센트)가 법인세 수입의 감소액인 50억 달러(2.5퍼센트)로 인해 부분 상쇄되었다.

개인세와 법인세를 합산하여 총 수입의 약 86퍼센트를 차지했다. 나머지 14퍼센트는 간접세, 실업세, 관세를 포함한 기타 수입이다.



정부로부터 유출된 것은 무엇인가? 순원가(2011 회계연도: 3조7천억 달러)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총원가에서 정부정책사업으로 획득한 수익(예: 메디케어 보험료, 국립공원 입장료, 우편서비스수수료)을 차감하고 연방공무원연금, 기타 퇴직연금, 기타 퇴직급여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로 인한 순손익을 조정한다. 2011 회계연도에 총순원가는 6,350억 달러(약 15퍼센트)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대부분 연방정부의 경제회복노력과 연방공무원 및 퇴직군인 연금과 관련된 특정비현금비용의 추정치가 2010 회계연도에서 2011 회계연도에 이르면서 상당부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소와 관련된 금액이 표1의 “변화”란에 반영되었으며, 이하에서 논의될 것이다.

도표 4는 대부분의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2011 회계연도에 정부 순원가 중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국방부, 사회보장청에서 지출된 것임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청 원가의 상당부분은 이들이 운영하는 주요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제도에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국방부 원가의 상당부분은 당기 운영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제도 및 기타 연금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사실 정부 전체에 걸쳐 정부의 3대 퇴직연금제도의 연방공무원과 퇴직군인의 미지급연금 변화와 관련된 당기원가와 보험수리적 및 기타추정 원가의 변동액(다음 페이지의 표1에 나타난 4,312억 달러 감소)만으로도 2011 회계연도의 정부 순원가의 총 감소액인 6,352억 달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최종 순운영원가 감소액 7,677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나아가 이러한 원가가 장기적 성격이라는 사실과 광범위한 복잡한 가정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전년대비 부처수준 또는 정부전체 수준의 원가가 상당히 변동할 수 있다.



정부의 “최종” 순운영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순원가에서 세수와 기타수입(도표3)을 차감한다. 순원가의 15퍼센트 감소는 세수와 기타수입의 6.6퍼센트 증가와 결합하여 정부의 “최종” 순운영원가가 2010 회계연도의 2조1천억 달러에서 2011 회계연도의 1조3천억 달러로 7,680억 달러(37퍼센트)감소하였다.

원가 대 적자: 무엇이 다른가?

미국 정부예산(대통령 예산)은 정부의 주된 재무계획 및 통제수단이다. 이는 정부가 수취한 금액을 말하는 수취액과 정부가 공공에 지출하는 비용인 지출액을 비교하여 예산상흑자(수취액이 지출액을 초과) 혹은 적자(지출액이 수취액을 초과)를 산출하여 정부의 공공자금 지출내역과 지출계획을 설명한다. 지출액은 주로 현금주의로 측정되고 수취액은 전적으로 현금주의로 측정된다. 즉, 본질적으로 정부가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출할 때에 측정이 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재무보고서(보고서)는 정부의 발생주의 원가, 이러한 원가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정부의 자산 및 부채의 규모, 재정지속가능성 전망을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징수했거나 수취한 것은 아니지만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인 정부의 수입을 (지출하지 않았지만 인식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순운영원가를 산출한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예산과 재무보고서는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미국지도자들에게 귀중한 의사결정과 관리의 수단을 제공한다.

표1은 재정적자와 순운영원가의 차이가 2010 회계연도의 7,862억 달러와 비교하여 2011 회계연도의 140억 달러로 비교적 매우 적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 회계연도 모두 연방저당권협회(Fannie Mae)와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Freddie Mac)와 같은 정부보증기관 투자자산에 대한 미래 지출액을 통합하여 연방공무원 및 퇴직군인연금과 관련된 증대한

비현금원가(즉, 예측부채의 변화)가 재정적자와 순운영원가의 차이의 변동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아가 이러한 금액의 변화(표1의 “변화”란)는 2010 회계연도와 2011 회계연도 사이의 정부 순원가 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미국 정부의 재무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Dollars in Billions	2011	2010	Increase / (Decrease)
Net Operating Cost	\$ (1,312.6)	\$ (2,080.3)	\$ (767.7)
Change in:			
Federal Employee and Veterans Benefits Payable	\$ 71.9	\$ 503.1	\$ (431.2)
Liabilities for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 (43.7)	\$ 268.0	\$ (311.7)
Other, Net	\$ (14.2)	\$ 15.1	\$ (29.3)
Subtotal - Net Difference:	\$ 14.0	\$ 786.2	\$ (772.2)
Budget Deficit	\$ (1,298.6)	\$ (1,294.1)	\$ 4.5

우리가 가진 것과 빚진 것(자산과 부채)

도표5는 정부의 자산 및 부채의 개요이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정부는 약 2조7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 유형자산 순액(8,528억 달러)과 대여금, 모기지담보증권 및 투자자산의 총합인 9,852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2011 회계연도에 정부의 총자산은 1,765억 달러 감소했는데 대부분 보완금융제도(SFP: Supplementary Financing Program)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현금예탁금의 제거에 따른 것이다. 보완금융제도에 따라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승인한 대출 및 유동성 정책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금을 공급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다.

도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부채는 대부분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공보유 연방정부 채무와 미지급이자(미지급이자)가 있는데, 그 잔액이 2011 회계연도동안 9조1천억 달러에서 10조2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둘째로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및 퇴직군인연금의 미지급액이 있는데, 2011 회계연도동안 5조7천억 달러에서 5조 8천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공공보유부채와 더불어 정부는 한 정부부문이 다른 부문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발생한 정부간 미상환채무가 약 4조7천억 달러라고 보고했다. 이는 사회보장신탁기금이나 의료보장신탁기금과 같은 정부기금이 보유한 채무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기금의 연간 수취액의 흑자는 연방정부의 채무증권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금액은 재무부의 부채이면서 정부신탁기금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전체의 재무제표 통합과정에서 제거된다. 공공보유채무와 정부간 채무의 합은 전체연방정부채무가 되는데, 이 금액은 얼마간의 조정을 거쳐 법적 상한선(채무 한도)의 제약을 받게 된다. 2011 회계연도에 부채한도는 두 차례 상향되었는데,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BCA: Budget Control Act)에 따라 2011년 8월에는 4천억 달러 상향되어 14조6천9백4십억 달러가 되었고, 2011년 9월에는 5천억 달러 상향되어 15조 1천9백4십억 달러가 되었다. BCA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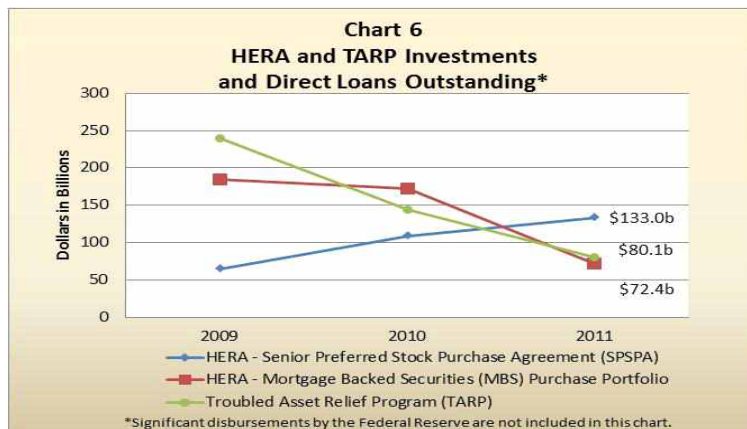
한도 상향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정부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차입을 늘려야 할 것이다. 공공보유채무의 증가속도가 일정기간 이상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안정화 노력에 대한 검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와 그 밖의 미국 정부기관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 중에는 주택시장과 금융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미국 가계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중대한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온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이 있다. 도표6은 이하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핵심경기회복사업과 관련된 투자액과 직접대출금의 미상환 잔액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HERA)에 따라 주택저당공사(Fannie Mae)나 대출저당공사(Freddie Mac)과 같은 주택분야 정부보증기관을 규제하는 연방주택금융국(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이 설립되었다.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HERA)은 또한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 Senior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 정책사업이나 정부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모기지담보증권 매입 정책사업(2009년 12월 31일 종료)과 같은 여러 정책사업을 통해 재무부가 주택분야 정부보증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은 정부가 필요시 주택저당공사나 대출저당공사에 사전에 자금을 공급하여 이들 기관이 부채를 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노력은 모기지 금리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 정책사업 하에서 재무부가 주택저당공사(Fannie Mae)와 대출저당공사(Freddie Mac)에 지급한 금액의 누적된 총합이 1,69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정부 재정상태표에 공정가치 1,330억 달러로 반영되었다. 또한 이 정책사업 하의 우발부채로 총 3,162억 달러가 발생했다. 2008년 10월과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재무부는 2,250억 달러의 기관보증 모기지담보증권을 매입했다. 2011년 3월, 재무부는 매입한 모기지담보증권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미상환 포트폴리오를 2010 회계연도 말의 1,722억 달러에서 2011년 9월 30일의 724억 달러로 절반 이상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재무부의 최초 매입액과 비교하여 3분의 2 이상이 감소된 것이다. (도표 6 참고)

2008년 제정된 긴급경제안정화법(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하에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실시되었다. 이는 미국금융시스템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수단을 재무부장관에게 제공하였다. 주택가치, 학자금 마련펀드, 퇴직자금계좌, 노후대비저축을 보호하고 주택소유권을 유지하며,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납세자의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공공의 회계책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경제안정화법(EESA)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이 부실자산을 최대 7,000억 달러까지 매입하거나 보증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다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예상 투자금액과 연계하여 누적권한을 4,750억 달러로 낮추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은행 정책사업은 이제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내고 있다. 재무부는 제너럴모터스사의 지분을 50퍼센트 감소시켰고, 크라이슬러 그룹의 만기 6년 전 대출금 조기상환으로 크라이슬러그룹에 대한 투자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나아가, 재무부는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AIG의 주요 구조조정 계획을 종료함으로써 정부가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했다. 도표 6은 2009 회계연도 이후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순 투자금액의 변동을 나타낸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이 설립된 이후 2011년 9월 30일까지 재무부는 직접대출금과 투자자산으로 4,134억 달러를 지출했고,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주거안정정책사업을 위하여 상황과 매각으로 2,769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원가

를 초과한 자산의 매각 및 환매 수익뿐만 아니라 이자 및 이익배당금으로 수령한 현금으로 거의 400억 달러를 보고했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은 총 미상환직접대출금과 지분투자금액으로 1,22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801억 달러로 평가되었다.(도표6 참고)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투자금액의 최종원가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경제, 금융시장, 특정 기업의 상황에 좌우될 것이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과 다른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financialstability.gov에서 찾을 수 있다.

2009년 봄 이후 실시된 경제회복계획과 노력은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HERA)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실시하는 그 외의 금융안정정책, 시장순응적인 통화정책, 회복법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반영하고 있다. 7,870억 달러 규모의 최초의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목표로 한다. 법안의 3분의 1은 기업과 근로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규정들이고 다른 3분의 1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위한 비상원조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지속적인 미래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에 관한 것이다.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하에서 연방기관이 지출한 누적금액은 2010년 9월 30일 기준의 3,079억 달러와 비교하여 총 4,214억 달러였다.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최신정보를 www.recovery.gov에서 구할 수 있다.

현재 진행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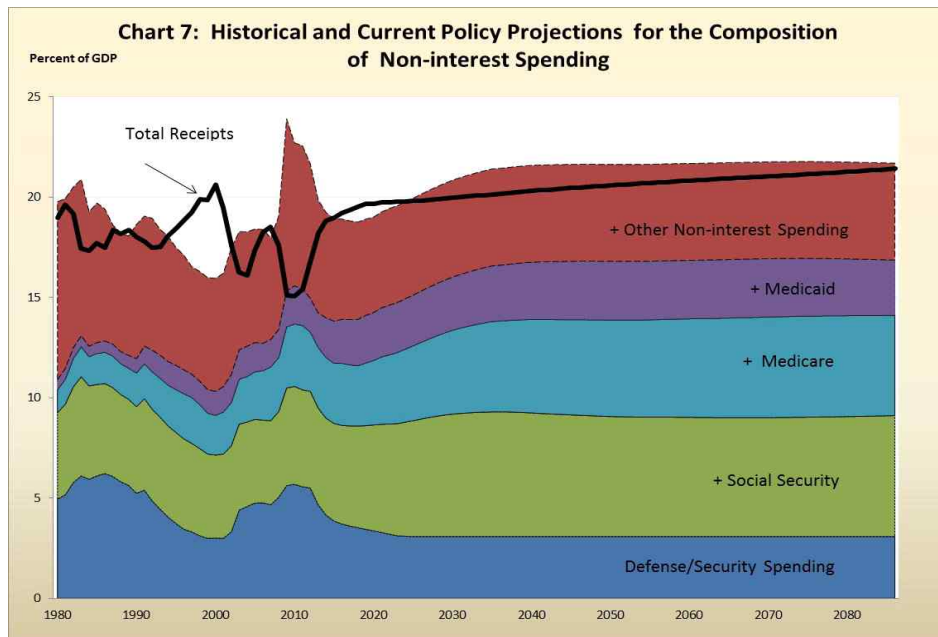
본 재무보고서의 중요한 목적은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이 현재의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개혁의 시급성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정책은 GDP 대비 공공보유부채의 비율(GDP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은 장기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에만 관련되어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의 공정성이나 내포된 효율성과는 관련이 없다.

현재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현재 정책이 무기한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GDP에 대한 비율로서 공공채무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도출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한 추정은 예상이나 예측이 아니다. 정책상 변화가 시행되면 당연히 재정적 결과는 추정치와 달라질 것이다.

근본적자(primary deficit), 이자 및 채무

무이자지출액과 수취액의 차이인 근본적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GDP

대비 공공보유채무의 비율의 결정요인이다. (그 외의 결정요인은 금리와 GDP 증가율이다.) 도표 7은 수취액, 무이자지출액과 그 차액인 근본적자를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 GDP대비 근본적자의 비율은 2009년 급격히 증가했고,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로 인해 2010년과 2011년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1년 예산통제법(BCA)에서 요구하는 지출감소가 효력을 나타내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GDP 대비 근본적자의 비율은 2012년에서 2019년 사이에 급격히 하락(2015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에서 2035년 사이에 지속적인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사회보장제도 및 보건사업지출액이 증가하면서 근본적자 혹은 근본흑자가 꾸준히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에 다시 근본적자가 발생하여 2035년에 GDP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2035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영향이 사라지면서 GDP대비 근본적자의 추정비율이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2035년과 2086년 사이에 근본적자는 평균적으로 GDP의 0.9퍼센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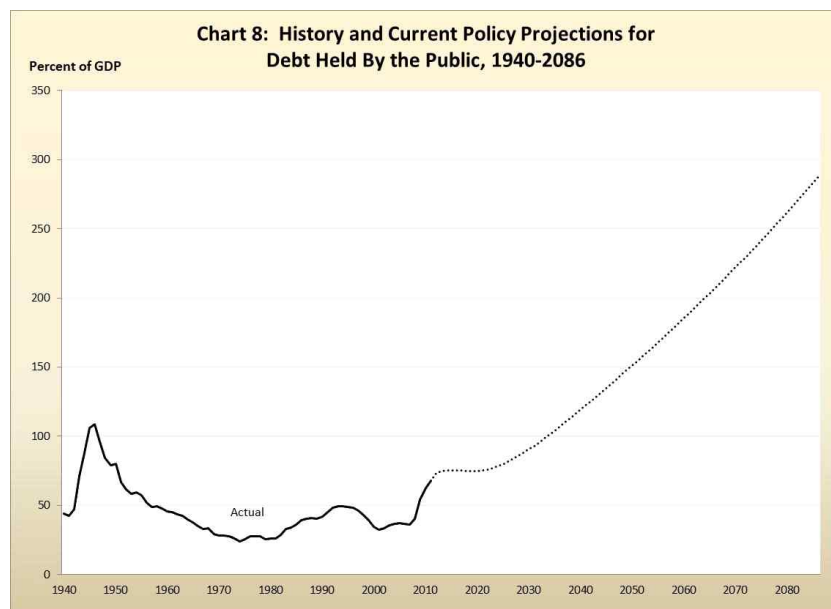


경기침체와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및 2010년 세금 구제, 고용보험 권한 및 직업창출법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에서 제정된 감세로 인해서 GDP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과 2010년에 상당히 감소했고 2011년에는 소폭 증가했다. 이 비율은 경제가 회복되고 일시적 세금감면이 종료되면서 다시 장기적 평균치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보다 높은 개인소득세 범위에 속하는 납세자의 수와 과세대상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는 GDP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소득 부분을 증가시키지 않는 법안을 계속해서 제정함을 가정하고 있다.

GDP에서 무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22.6퍼센트 수준에서 2013년에 약 20퍼센트로 감소하고, 2026년까지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거나 하락하다가 그 후에 점차 상승하여 2040년경부터는 약 22퍼센트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2

년간 GDP에서 무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는 주로 예산통제법(BCA)으로 제정된 재량지출의 상한선 설정과 추가적인 자동 지출삭감에 따른 것이고, 이후의 증가는 주로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향후 25년간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4, 1.3, 1.0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5년 이후에는 GDP에서 사회보장제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속도가 점차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추정원가의 증가를 2009년 재무보고서의 추정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추었다. 그러나 추정하고 있는 원가절감, 생산성 개선, 의료인급여수준의 감소가 시간경과에 따른 추정된 원가의 증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리와 GDP의 추정치와 더불어 도표 7에 제시된 근본적자의 추정치는 도표 8에 나타난 GDP대비 공공보유채무 비율의 추정치를 결정한다. 이 비율은 2011회계연도 말에 68퍼센트였고 현 정책 하에서는 2022년에 76퍼센트, 2042년에는 125퍼센트, 2086년에는 287퍼센트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GDP대비 채무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올해의 추정치는 2010년 재무보고서의 추정치보다 다소 긍정적이다. 작년의 보고서는 GDP대비 채무의 비율이 2085년에 352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올해 보고서는 283퍼센트로 추정하고 있다. 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된 것은 주로 2011년 예산통제법(BCA)이 요구하는 지출감소가 다소 덜 긍정적인 경제·기술적 가정을 일부 상쇄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재정격차와 정책개혁 지연 비용

GDP대비 채무 비율이 향후 75년간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 기간 동안 평균 GDP의 1.1퍼센트가 되는 근본흑자를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 정책 하에서 GDP의 0.7퍼센트를 차지하는 평균근본적자와 대비된다. “75년 재정격차”라고 하는 이 차이는 GDP의 1.8퍼센트이며, 향후 75년간 추정세입과 무이자지출액의 현재가치의 약 9퍼센트이다.

75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75년간 평균적으로 GDP의 1.8퍼센트에 이르는 지출감소와 수익증가가 동시에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75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75년의 기간 중 마지막 55년에 개혁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면 요구되는 개혁의 규모가 75년간 전체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보다 60퍼센트 증가하게 된다.

결론

미국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ACA)과 2011년 예산통제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지출의 장기적 상승추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예산통제법으로 재량지출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이 두 법안이 결합하여 장기적 재정격차의 추정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도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GDP대비 채무의 비율은 향후 75년과 그 이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의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기회복을 둔화시킬 정도로 정책변화가 너무 급격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 하에서 이러한 추세를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수록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수증가나 세출감소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현 정책 하에서의 세출과 세수의 추정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지만, 현재의 정책이 무기한 지속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래 전망

미국은 계속해서 이례적인 금융 및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재무부와 정부 전체가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개발하고 시행하면서 진척의 징후가 이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예상되는 미래의 세입수준과 비교하여 사회보험프로그램과 관련된 장기적 재정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적자와 채무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사회보험비용과 자금원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지연하는 것은 필요한 개혁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부담만 키울 것이다. 아직 할 일이 많고 장·단기적 어려

움이 남아있지만, 연방정부는 당 회계연도에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으며, 미래에 계속해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더 찾아 보기

미국재무부가 발행한 2011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의 일부인 본 안내서에서 언급한 주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현재 재무상태와 미래 성장가능성 모두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연방정부가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와 미래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 국민을 위한 안내서와 전체 보고서에서 논의된 주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다. 재무보고서의 포괄적인 보고는 입법가(국회의원)와 일반대중의 의사결정 필요에 도움을 주고 지원하며, 미국의 재정기반을 계속해서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든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2011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와 미국의 재정에 관한 기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 미국재무부의 재무관리서비스

<http://www.fms.treas.gov/fr.html>

- 관리예산처

<http://www.whitehouse.gov/omb/financial/index.html>

- 감사원

<http://www.gao.gov/financial.html>

본 국민을 위한 안내서는 2011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제시한다. 미국 정부의 통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본 보고서의 211페이지부터 시작된다. 감사원은 주로 2010년과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 Statement of Social Insurance)에 반영된 메디케어 비용 증가의 감소추정 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실성(본 보고서의 주석 26에서 논의)이 존재하기 때문에 2010년과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와 2011년 사회보험액변동표(SCSIA: Statement of Changes in Social Insurance Amounts)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절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07년, 2009년 2009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특정한 재무보고통제의 결함과 감사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타 제약으로 인해 본 보고서에 포함된 2010년과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못했다.

정부 재무상태와 현황

미국 정부의 재무보고서는 대통령, 의회, 미국국민들에게 연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재무상태,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기타 책임과 의무, 현재와 미래에 국가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정문제를 다룬다.

다음 표는 미국 정부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몇 가지 핵심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는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NATION BY THE NUMBERS		
A Snapshot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Position & Condition		
billions of dollars	2011	2010
Gross Costs	\$ (3,998.3)	\$ (4,472.3)
Less: Earned Revenues	\$ 365.6	\$ 309.2
Gain / (Loss) from Changes in Assumptions	\$ (28.1)	\$ (132.9)
Net Cost	\$ (3,660.8)	\$ (4,296.0)
Less: Total Taxes and Other Revenues	\$ 2,363.8	\$ 2,216.5
Unmatched Transactions and Balances	\$ (15.6)	\$ (0.8)
Net Operating Cost	\$ (1,312.6)	\$ (2,080.3)
Assets:	\$ 2,707.3	\$ 2,883.8
Less: Liabilities, comprised of:		
Debt Held By the Public & Accrued Interest	\$ (10,174.1)	\$ (9,060.0)
Federal Employee & Veteran Benefits	\$ (5,792.2)	\$ (5,720.3)
Other	\$ (1,526.4)	\$ (1,576.3)
Total Liabilities	\$ (17,492.7)	\$ (16,356.6)
Net Position (Assets Minus Liabilities)	\$ (14,785.4)	\$ (13,472.8)
Sustainability Measures:		
Social Insurance Net Expenditures ¹	\$ (33,830)	\$ (30,857)
Total Non-Interest Net Expenditures ²	\$ (6,400)	\$ (16,300)
Sustainability Measures as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³:		
Social Insurance Net Expenditures	-3.8%	-3.7%
Total Federal Government Non-Interest Net Expenditures	-0.7%	-1.9%
Budget Results		
Unified Budget Deficit	\$ (1,298.6)	\$ (1,294.1)
<small>1 Source: Statement of Social Insurance. Amounts equal present value of projected revenues and expenditures for scheduled benefits over the next 75 years of certain benefit programs that are referred to as Social Insurance (e.g., Social Security, Medicare). Amounts represent 'open group' population (all current and future beneficiaries). Not considered liabilities on the balance sheet.</small>		
<small>2 Represents the 75-year projec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s receipts less non-interest spending as reported in the 'Statement of Long Term Fiscal Projections' in the Supplemental Information section of the Financial Report of the U.S. Government.</small>		
<small>3 GDP values represent the average of 75-year present value of nominal GDP values from 2011 and 2010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from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rustees Reports.</small>		

경영진의 분석의견 (MD&A: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도입

2011 회계연도의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보고서)는 대통령, 의회, 미국국민들에게 정부의 재무상태, 수익과 비용, 기타 의무와 약정 등 연방정부 재정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재정문제와 중대한 상태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의 보고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노력과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의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헌법 331 (e)(1) 31에 따라 재무부는 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감사를 받은 본 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적시에 목적적합한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개별 기관 및 정부전체의 보고기한을 앞당겼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 각 부처와 다수의 소규모 독립기관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지명된 연방기관들(다음 페이지의 조직도 참고)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감사원(GAO)은 지난 14년간 그래왔듯이 2010년과 2011년 9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의 발생주의 통합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거절을 표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2007년, 2008년, 2009년의 사회보험보고서(SOSI: Statement of Social Insurance)에 대해서 적정의견을 표명한 이후에 2010년과 2011년의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거절했으며, 2011년 사회보험액변동표(SCSIA: Statement of Changes in Social Insurance Amounts)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거절했다. 의견거절이란 보고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11 회계연도에 35개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32개 기관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2011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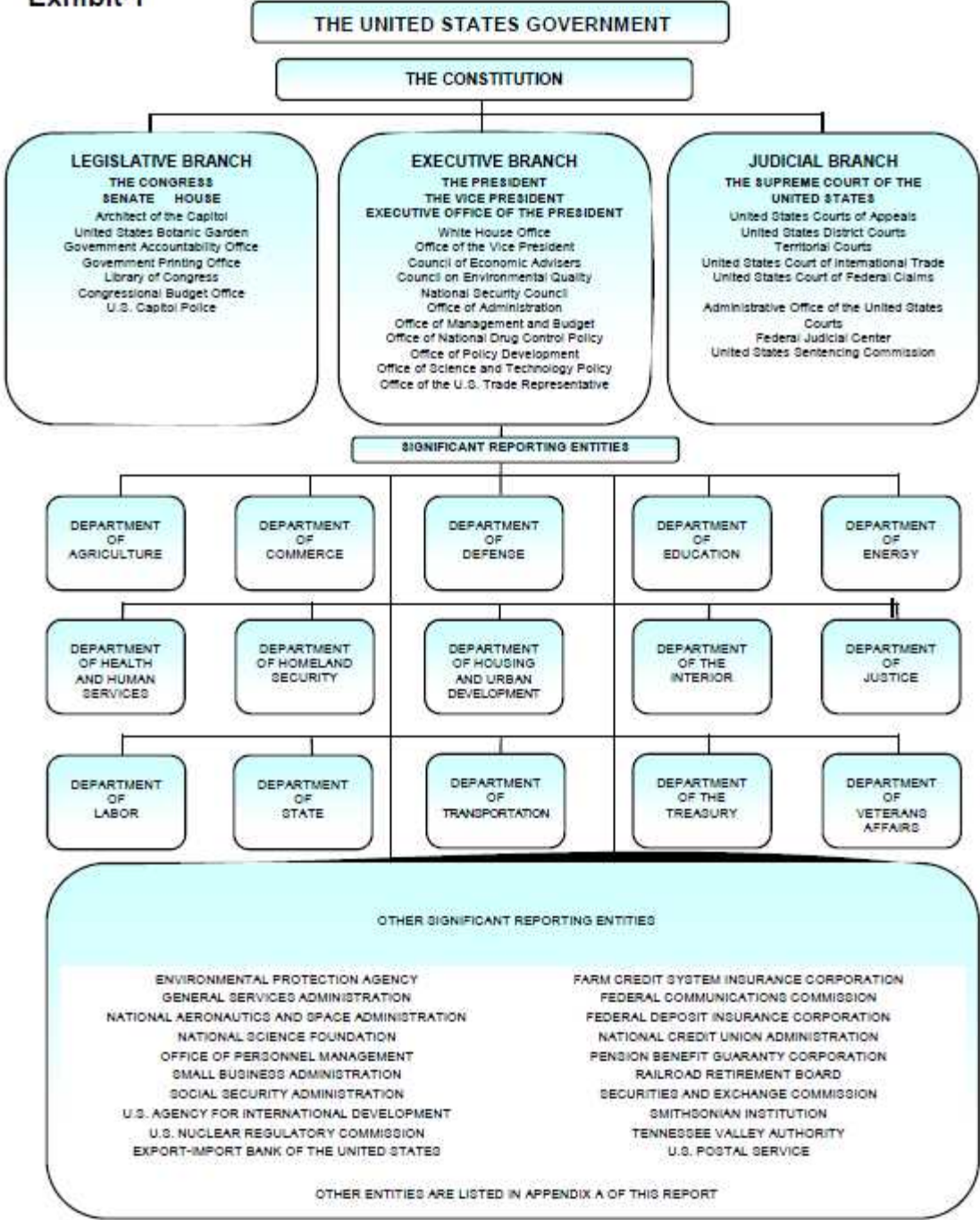
- 재정동향 및 성과동향과 같은 재무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과 분석을 제공하는 경영진의 분석의견(MD&A)
- 신규 사회보험액변동표를 포함한 주요재무제표와 해당 재무제표 관련 주석
- 보충적 수탁책임정보
-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보고서의 핵심주제를 신속하게 참고하고 정부 재무상태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했다.

임무와 조직

근본적인 정부의 임무는 다음의 헌법에서 유래한다. “... 보다 완전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누리는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공공서비스와 목표를 추구하면서 시간경과에 따라 임무와 계획이 세분화되면서 의회는 정책사업을 승인하고 기관은 이를 시행한다.

Exhibit 1



이러한 주요 공공서비스와 목표에는 국가방위를 도모하고, 저렴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증진하고, 소득안정성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개선하고, 퇴직군인에 연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주택과 교통체계를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자원의 안보에 기여하고, 각 주의 교육시행을 지원하는 것이 있다.

상기의 그림 1은 미국 정부의 개략적인 조직도이다.

정부의 재정상태

정부의 재무 혹은 재정 상태를 완전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결과의 분석, 미래 수익과 비용의 추정, 정부의 장기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2011 회계연도 말의 정부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한 해 동안 재무상태의 변동추세와 원인을 설명하고, 정부의 재무상태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표 1과 다음 내용은 연방정부의 재무상태의 개요이다.

- 정부의 총원가는 거의 11퍼센트 감소하여 4조 달러가 되었다.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국립공원입장료)로 획득한 수익인 3천6백5십6억 달러를 공제하고 가정의 변화로 인한 손실 281억 달러를 추가하여 순원가가 3조7천억 달러가 되었다.
- 세금과 기타수익이 1천4백7십억 달러 증가하여 2조4천억 달러가 되었는데, 정부의 순원가와 상계하여 “최종” 순운영원가는 1조3천억 달러가 된다.
- 2011년 정부의 총자산 2조7천억 달러를 총부채 17조5천억 달러와 비교하면, 부의 순포지션 14조8천억 달러가 도출된다. 정부부채는 대부분 공공보유 연방정부 채무와 미지급발생이자인 10조2천억 달러와 연방공무원과 퇴직군인의 미지급연금 5조8천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채무한도가 적용되는 정부의 총 채무는 14조7천4백7십억 달러이다. 2011년 예산통제법에 따라 채무한도는 2011 회계연도기간동안 15조1천9백4십억 달러로 총 9천억 달러가 증가했다.

본 보고서는 또한 정부의 미래 재무상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연방정부의 회계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보고서(SOSI)와 장기재정전망명세서(본 보고서의 보충정보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에 보고된 사회보험 지출액은 연방정부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유용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Table 1 The Federal Government's Financial Position and Condition				
Dollars in Billions	2011	2010	Increase / (Decrease)	
			\$	%
FINANCIAL MEASURES				
Gross Cost	\$ (3,998.3)	\$ (4,472.3)	\$ (474.0)	(10.6%)
Less: Earned Revenue	\$ 365.6	\$ 309.2	\$ 56.4	18.2%
Gain/(Loss) from Changes in Assumptions	\$ (28.1)	\$ (132.9)	\$ (104.8)	(78.9%)
Net Cost¹	\$ (3,660.8)	\$ (4,296.0)	\$ (635.2)	(14.8%)
Less: Taxes and Other Revenue:	\$ 2,363.8	\$ 2,216.5	\$ 147.3	6.6%
Unmatched Transactions & Balances	\$ (15.6)	\$ (0.8)	\$ 14.8	1850.0%
Net Operating Cost²	\$ (1,312.6)	\$ (2,080.3)	\$ (767.7)	(36.9%)
Assets³:				
Cash & Other Monetary Assets	\$ 177.0	\$ 428.6	\$ (251.6)	(58.7%)
Loans Receivable and Investments, Net ⁴	\$ 985.2	\$ 942.5	\$ 42.7	4.5%
Property, Plant & Equipment, Net	\$ 852.8	\$ 828.9	\$ 23.9	2.9%
Other	\$ 692.3	\$ 683.8	\$ 8.5	1.2%
Total Assets	\$ 2,707.3	\$ 2,883.8	\$ (176.5)	(6.1%)
Liabilities⁵:				
Federal Debt Held by the Public & Accrued Interest	\$ (10,174.1)	\$ (9,060.0)	\$ 1,114.1	12.3%
Federal Employee & Veterans Benefits	\$ (5,792.2)	\$ (5,720.3)	\$ 71.9	1.3%
Other	\$ (1,526.4)	\$ (1,576.3)	\$ (49.9)	(3.2%)
Total Liabilities	\$ (17,492.7)	\$ (16,356.6)	\$ 1,136.1	6.9%
Net Position (Assets minus Liabilities)	\$ (14,785.4)	\$ (13,472.8)	\$ (1,312.6)	(9.7%)
SUSTAINABILITY MEASURES				
Social Insurance Net Expenditures⁵:				
Social Security (OASDI)	\$ (9,157)	\$ (7,947)	\$ 1,210	15.2%
Medicare (Parts A, B, & D)	\$ (24,572)	\$ (22,813)	\$ 1,759	7.7%
Other	\$ (101)	\$ (97)	\$ 4	4.1%
Total Social Insurance Net Expenditures	\$ (33,830)	\$ (30,857)	\$ 2,974	9.6%
Total Federal Government Noninterest Net Expenditures⁶	\$ (6,400)	\$ (16,300)	\$ (9,900)	(60.7%)
BUDGET DEFICIT				
Unified Budget Deficit⁷	\$ (1,298.6)	\$ (1,294.1)	\$ 4.5	0.3%

1 Source: Statement of Net Cost.

2 Source: Statements of Operations and Change in Net Position.

3 Source: Balance Sheet.

4 Includes Loans Receivable and Mortgage-Backed Securities,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 Investments, and Investments in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GSEs).

5 Source: 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 (SOI). Amounts equal estimated present value of projected revenues and expenditures for scheduled benefits over the next 75 years of certain 'Social Insurance' programs (Social Security, Medicare Parts A, B, & D, Railroad Retirement - Black Lung is projected through 2040). Amounts reflect 'Open Group' totals (all current and projected program participants during the 75-year projection period).

6 Represents the 75-year projec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s receipts less non-interest spending as reported in the Statement of Long-Term Fiscal Projections in the Supplemental Information section of the Financial Report.

7 Source: Final Monthly Treasury Statement (as of 9/30/2011 and 9/30/2010).

Note: totals may not equal sum of components due to rounding.

- 사회보험보고서(SOSI)는 75년간 예정된 사회보장, 메디케어 A, B, D 항목, 기타 사회보험프로그램의 급여에 대한 정부의 추정지출액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의 하위그룹과 비교한다.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에서 추정사회보험지출액은 2010년 추정치보다 3조 달러 증가하여 추정수익보다 34조 달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기타 주요 정책사업(국방, 메디케이드, 교육 포함)의 추정지출액과 미래 세수 또한 정부의 미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 정책 하에서 향후 75년 동안 정부의 총 예상무이자지출액(사회보험프로그램 포함)은 총 예상수취액을 6조4천억 달러만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현재 재무상태와 장기 재무상태는 경제 전체와 관련해서 달러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해에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규모를 측정한다. GDP와 관련하여 재무성과를 고려하는 것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능력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가 된다. 예를 들어,

- 지출액 3조6천억 달러와 순수취액 2조3천억 달러가 발생하여 2011 회계연도의 통합재정적자는 2010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인 1조 3천억 달러를 유지했다. (GDP의 8.7 퍼센트)
- 정부는 현금기반 지출액과 수취액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적자에 반영되지 않은 특정 현금거래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 2011 회계연도에 미지급이자를 제외하고 공공보유채무가 10조1천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GDP의 67.7퍼센트이다.
-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보고된 정책사업에 대해 75년간 지출액이 수취액을 34조 달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금액은 75년간 GDP의 현재가치의 약 3.8퍼센트가 된다. 본 보고서 보충정보부분의 ‘장기재정전망명세서’에서 총 무이자 지출 추정액이 수취액을 6조4천억 달러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초과액은 GDP의 0.7퍼센트를 차지한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추정은 결과적으로 추정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감사결과

2011 회계연도에 감사원은 발생주의 정부전체 재무제표에 대해 15년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2007, 2008, 2009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2011년 사회보험액변동명세서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거절한 이후에, 2010년과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의 감사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거절했다. 2010년과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와 2011년 사회보험액변동명세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한 것은 주로 2010년과 2011년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반영된 메디케어 비용 성장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이 달성될지 여부에 상당한 불확실성(주석 26 참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고재무책임자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에 따라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발행해야 하는 2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은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그 외의 11개의 중요한 보고기관은 11개 기관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 (기관 목록은 표2와 부록A 참고)

정부전체의 보고실체

이러한 재무제표는 정부의 세 부(입법, 행정,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보고는 주로 예산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특정 입법부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부 기관들

도 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 받는다. 그 외의 일부 입법기관들도 감사를 받은 재무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행한다.

연방준비제도(전반적으로 의회의 감시를 받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간주), 일체의 신탁기금, 연방 주택 융자 은행(Federal Home Loan Bank), 주택저당공사(Fannie Mae), 대출저당공사(Freddie Mac)를 포함한 정부보증기관 등 수많은 기관과 조직들은 운영의 특성상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된다. 2008년의 긴급경제안정법(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은 재무부장관이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고 보증할 수 있는 일시적 권한을 재무부장관에게 제공했다. 연방기관에 대한 미국 GAAP에 따라, 정부는 직·간접, 혹은 실질적으로 재무부가 과반수지분에 투자한 일체의 금융조직이나 상거래기관의 자산, 부채, 운영성과를 (정부)재무제표에 통합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지분투자 중 일부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지분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은 그러한 기관의 재무성과의 일부나 전체를 연방정부의 재무보고서에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연방재무회계개념서(SFFAC: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의 문단 50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부채는 재무제표에 기록된다. 부록 A는 본 보고서의 작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후에 2011 회계연도의 정부의 재무성과, 예산, 국가경제, 채무,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회복노력, 사회보험연금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포함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본 재무보고서의 내용은 대통령 예산과 함께 국가 지도자들이 현재 운영을 관리하고 미래 정책을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Table 2: FY 2011 Financial Statement Audit Results by Agency

Chief Financial Officers (CFO) Act Agency	Audit Opin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Unqualified
Department of Commerce (DOC)	Unqualified
Department of Defense (DOD)	Disclaimer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	Unqualified
Department of Energy (DOE)	Unqualified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¹	Unqualifie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²	Qualifie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Unqualified
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	Unqualified
Department of Labor (DOL)	Unqualified
Department of Justice (DOJ)	Unqualified
Department of State (State) ³	Qualified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Unqualified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Unqualified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Unqualifie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Unqualified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Unqualified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Unqualified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Unqualified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Unqualified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Unqualified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Unqualified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Unqualifie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Unqualified
Other Significant Reporting Entities	Audit Opinion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Unqualified
Farm Credit System Insurance Corporation (FCSIC) ⁴	Unqualified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Unqualified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⁵	Unqualified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 ⁶	Unqualified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PBGC)	Unqualified
Railroad Retirement Board (RRB)	Unqualified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Unqualified
Smithsonian Institution ⁷	Unqualified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Unqualified
U.S. Postal Service (USPS)	Unqualified

¹ Received disclaimer of opinion on Statement of Social Insurance and Statement of Changes in Social Insurance Amounts.

² Balance Sheet and Custodial Statement Audit Only.

³ Received unqualified opinion on Statement of Budgetary Resources and Consolidated Statement of Net Cost, and a qualified opinion on the Consolidated Balance Sheet and Statement of Changes in Net Position.

⁴ Entities operate under calendar year (CY)-end. Opinions reflect CY 2010 audit results.

⁷ Opinion on the most recent annual report, covering FY 2010.

재무제표의 한계

주요재무제표는 미국헌법 331(e)(1) 31의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 사회보험정책사업의 재무상태 및 재무상태의 변화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예산자원의 관측 및 통제 목적으로 동일한 장부와 기록에서 작성한 재무보고서를 보충하는 것이다.

대통령예산과 재무보고서

행정부는 매년 연방정부의 재무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두 개의 보고서를 발행한다. 대통령 예산은 전기의 재정 및 성과결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업계획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시하고, 본 재무보고서는 정부운영을 위한 발생주의원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원, 재무상태표, 전반적인 재정전망에 대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개요를 대통령, 의회,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재무부는 일반적으로 본 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연방기관을 위한 미국 GAAP에서 규정하는 대로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정부의 고유한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 제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관들은 고유한 구성의 “순원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운영에 사용되는 순정부자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예산과 재무회계결과 간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둘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무표를 작성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예산	미국 정부의 재무보고서
<p><u>주로 “현금주의”로 작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중심, 장래: 계획된 현재와 미래의 사업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춤 • 수취액(“들어온 현금”), 수취시 기록되는 세금 및 기타징수액 • 지출액(“나가는 현금”), 지급시 주로 기록됨 	<p><u>“발생주의 및 수정현금주의”로 작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중심, 소급: 사업시행을 위해 사용된 과거와 현재의 자원 • 수익: 수정현금주의에 따라 인식되는 세수(전체 수익의 90퍼센트 이상) (재무제표 주석 1. B. 참고) 그 외의 금액은 반드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획득한 경우에 인식 • 원가: 반드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인 경우에 인식

재정적자 대 순운영원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주로 현금에 기반한 정부의 재정적자가 2008 회계연도, 특히 2009 회계연도에 금융위기, 경기침체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대응의 영향으로 인해 상당히 증가한 이후에 2010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동일한 수준인 약 1조3천억 달러를 유지했다. 이와 같이 적자가 증가한 것은 일부 경기침체기에 지출을 늘리고 징수액을 감소시켜서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는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한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것이다. 실업급여, 사회보장,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책사업의 지출 증가와 세수의 감소는 입법상의 정책변화가 전혀 없더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자동적”이라고 한다. 최근의 경제회복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자동 안정화 장치”는 최근 몇 년간 적자의 증가를 유발했다. 그러나 적자는 2010 회계 연도에 감소했으며, 2011년에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체로 발생주의에 기반한 정부의 순운영원가(2010 회계연도에 2조1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1 회계연도에 1조3천억 달러로 감소)는 통상적으로 적자를 상회하는데, 이는 주로 군인, 연방공무원, 퇴직군인 대상 정부퇴직연금제도의 미래추정부채의 원가발생이나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장기적인 보험수리적 원가는 정부의 순운영원가에 포함이 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생주의로 산출되지만, 주로 현금주의에 기반하는 재정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과 기관의 보험계리사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연금의 부채를 예측하지만, 실제로 기금은 아직 지출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주택저당공사(Fannie Mae), 대출저당공사(Freddie Mac)를 지원하는 경기회복 정책사업과 관련된 장기추정부채의 변화 역시 원가가 정부의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표3은 2011 회계연도에 정부의 재정적자와 순운영원가의 순 차액인 140억 달러가 2010 회계연도의 순 차액 7,862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금액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3에 나타난 것처럼 이는 주로 기관들이 공무원연금 및 퇴직군인연금 부채의 상당한 증가를 기록하였고, 2010 회계연도에 주택저당공사와 대출저당공사와 같은 정부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이 각각 5,031억 달러와 2,680억 달러였는데 2011 회계연도에 동일한 금액에 변동사항이 거의 없었다(주택저당공사와 대출저당공사가 각각 719억 달러 증가하고 437억 달러 감소)는 사실 때문이다. 차후에 보다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2010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미래 공무원연금 및 퇴직군인연금 성장 추정금액 감소는 경험과 경제·인구학적 가정의 변화와 2010 회계연도 중 이러한 예측의 일관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새로운 연방 정부회계기준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보증기관은 이들 기관에 대한 지급액과 보다 낮아진 추정으로 인해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에 논의하고 표3의 “변화”란에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추정액의 변화의 차이는 2011 회계연도에 상당한 보험수리적 원가 감소 및 총비용 감소의 결과를 가져왔다.

Table 3: Budget Deficit vs. Net Operating Cost

Dollars in Billions	2011	2010	Increase / (Decrease)
Net Operating Cost	\$ (1,312.6)	\$ (2,080.3)	\$ (767.7)
Change in:			
Federal Employee and Veterans Benefits Payable	\$ 71.9	\$ 503.1	\$ (431.2)
Liabilities for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 (43.7)	\$ 268.0	\$ (311.7)
Other, Net	\$ (14.2)	\$ 15.1	\$ (29.3)
Subtotal - Net Difference:	\$ 14.0	\$ 786.2	\$ (772.2)
Budget Deficit	\$ (1,298.6)	\$ (1,294.1)	\$ 4.5

정부의 순포지션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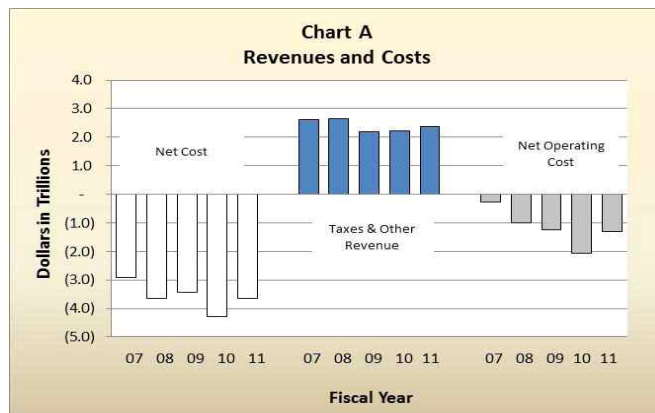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정부의 재무상태는 흑자 또는 적자, 채무를 중심으로 한 ‘예산’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주로 현금주의에 기반한 정부의 순지출(적자) 및 순수입(흑자)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재무상태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다. 정부의 발생주의 순포지션(정부 자산과 부채의 차이) 및 “최종” 순운영원가(수입과 원가의 차이) 역시 중요한 재정 지표이다.

수익과 원가: “들어온 것과 나간 것”

정부의 **운영 및 순포지션 변동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매우 유사하게 정부의 “최종 결과”와 이것이 순포지션(부채를 차감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정부는 원가에서 (1)정부사업을 통해 획득한 수입(메디케어 보험료, 국립공원 입장료, 우편요금 등)을 차감하여 순원가를 도출하고 (2)세금 및 기타수입을 차감하여 정부의 “최종 결과”인 순운영원가를 산출한다.

도표 A와 표 4는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총 순운영원가를 발생시켰기(원가가 수익을 초과했기) 때문에 순포지션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즉, 표 4는 정부의 “최종” 순운영원가가 2011 회계연도에 2010 회계연도의 2조 803억 달러에서 37퍼센트 혹은 7,680억 달러 감소한 1조3,126억 달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4에 요약되어 있고 이하에 논의된 것처럼 2011 회계연도의 순운영원가의 감소는 수입이 소폭 증가하고 순원가가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순운영원가와 통합재정적자의 조정표는 주로 발생주의에 기반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정부의 순운영원가가 더욱 잘 알려진 현금주의 재정적자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보여주고 있다. 표 3에 요약되어 있듯이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연방공무원 및 퇴직군인 연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순 부채의 추정현재가치의 변동과 관련된 원가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발생주의 원가가 정부의 총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도표 E에 나타나 있다.

Dollars in Billions			Increase / (Decrease)	
	2011	2010	\$	%
Gross Cost	\$ (3,998.3)	\$ (4,472.3)	\$ (474.0)	(10.6%)
Less: Earned Revenue	\$ 365.6	\$ 309.2	\$ 56.4	18.2%
Subtotal	\$ (3,632.7)	\$ (4,163.1)	\$ (530.4)	(12.7%)
Gain/(Loss) from Changes in Assumptions	\$ (28.1)	\$ (132.9)	\$ (104.8)	78.9%
Net Cost	\$ (3,660.8)	\$ (4,296.0)	\$ (635.2)	(14.8%)
Less: Taxes and Other Revenue	\$ 2,363.8	\$ 2,216.5	\$ 147.3	6.6%
Unmatched Transactions and Balances	\$ (15.6)	\$ (0.8)	\$ 14.8	1850.0%
Net Operating Cost	\$ (1,312.6)	\$ (2,080.3)	\$ (767.7)	(36.9%)

수익: “들어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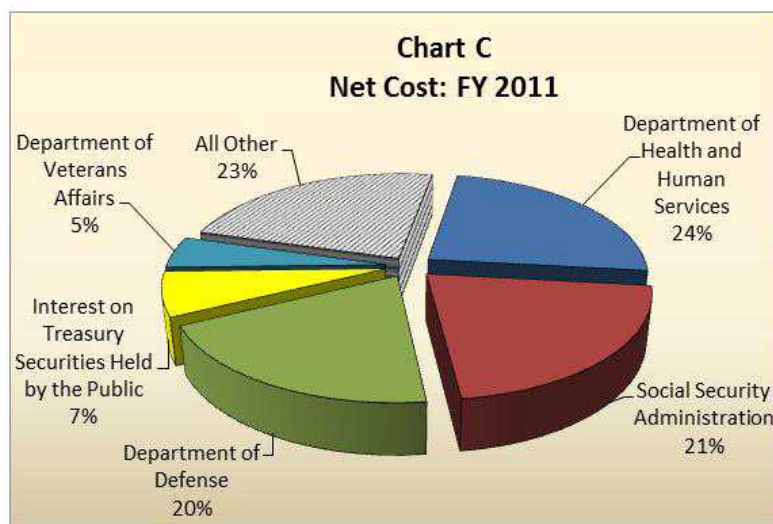
순원가 보고서는 메디케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나 우편요금과 같은 연방정부의 사업으로 발생한 “획득한” 수익을 보고한다. **운영 및 순포지션 변동표**는 정부의 세수 및 기타수익(“획득한” 수익 이외의 수익)을 나타낸다. 도표 B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 수익이 다소 감소하여 그 효과가 상쇄되긴 하였으나 개인소득세 수익과 기타수익의 근소한 증가가 정부 전체 수익을 1,470억 달러(6.6퍼센트) 증가시켜, 2011 회계연도의 정부 총수익이 약 2조 4천억 달러가 되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수익의 합이 2011 회계연도의 전체 수익의 86퍼센트를 차지했다. 나머지 14퍼센트는 물품세, 실업세, 관세 등 다양한 기타세금 및 수취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가: “나간 것”

순원가 보고서는 또한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를 보여준다. 원가가 발생하면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관계없이 이를 인식한다. (발생주의) 순원가 보고서는 정부의 순원가, 즉, (1) 정부가 생산한 재화 혹은 제공한 서비스의 원가, (2)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로 인해 당기에 발생하여 획득한 수익과 (3) 장기적 추정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변화로 인한 손익의 순액으로 그 출처를 보여준다. 그 후에 이 금액은 운영 및 순포지션 변동표에 나타난 정부의 세수 및 기타 수익과 상쇄되어 “최종 결과” 혹은 순운영 원가가 산출된다. 도표 C는 2011 회계연도의 정부의 순원가(총원가에서 획득한 수익과 가정의 변화로 인한 이익/손실을 차감한 금액) 3조 6,608억 달러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는 2010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15퍼센트 혹은 6,352억 달러 감소한 금액이다. 2011 회계

연도에 총 순원가의 3분의 2는 국방부, 사회보장청, 보건후생부에서 발생했는데, 도표 C와 D에서 보듯이 이들 기관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정부의 총 순원가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기관으로 꼽혀왔다. 보건후생부와 사회보장청 비용(2011 회계연도의 총비용이 각각 8,771억 달러와 7,825억 달러)의 대부분은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사회보험정책사업, 즉,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것이다. 사회보험보고서와 정부의 장기재정추정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를 포함한 본 보고서의 관련 정보는 이들 정책사업의 미래 추정수익과 지출, 지속가능성을 더욱 상세하게 논의한다. 국방부의 순원가인 7,187억 달러는 주로 군인연금과 군인건강급여의 운영과 장기원가로 인한 것이다. 도표 C와 D는 퇴직군인부(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와 공공보유부채의 이자 역시 2011 회계연도에 정부 순원가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순원가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기관들은 전부 합하여 정부의 총 순원가의 23퍼센트를 차지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순원가의 변화는 주로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 퇴직군인부(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보고하는 정부의 군인 및 공무원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현재 원가, 특히 보험수리적 원가 및 기타 추정원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 OPM은 주로 실제 생계비조정(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과 예상보다 낮은 급여증가 및 보험수리적 예측의 변동으로 인해 기관의 총원가가 1,260억 달러 감소했다.
- 국방부의 원가는 퇴직군인의 건강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할인율과 인구학적 가정의 변동으로 인해 1,310억 달러 감소했다.
- 퇴직군인부는 2010 회계연도에 상당한 원가증가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2011 회계연도에는 1,527억 달러의 원가감소를 기록했는데, 2010 회계연도에 세 가지 신규 추정장애급여의 초기원가를 인식(매 해 그 이후의 조정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임)했고 새로운 연방정부 회계기준에 따라 수정된 추정 및 산출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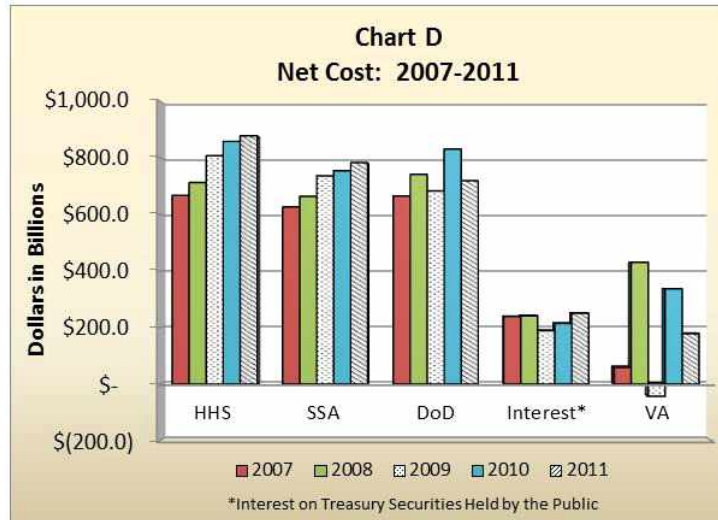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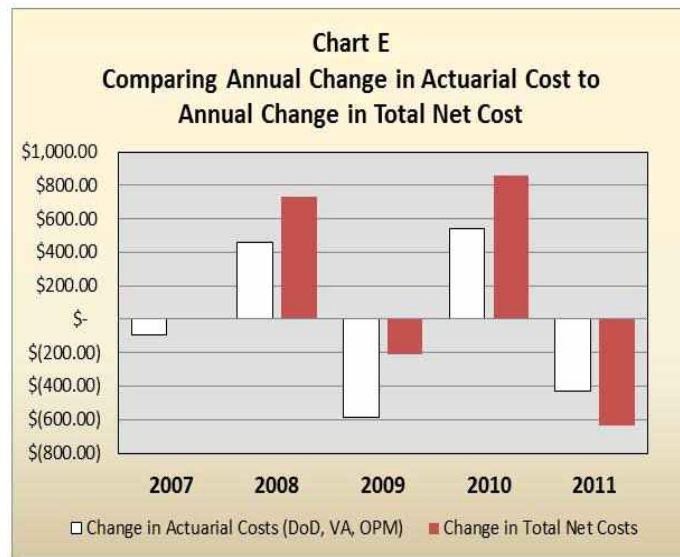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퇴직군인 연금을 포함한 정부의 3대 퇴직연금제도의 예상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보험수리적 원가 및 기타 예상 원가를 합산하여 4,312억 달러 감소한 것이 2011 회계연도의 정부의 총 순원가의 총 순감소액인 6,352억 달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도표 E 참고)

대조적으로 이러한 비용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0 회계연도에 보험수리적 원가가 5,38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이 2010년 정부 순원가의 총 증가분인 8,266억 달러의 65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이자율, 수급조건, 예상수명, 의료비수준, 보상수준, 생계비를 포함하고, 그 외에도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복잡한 일련의 가정을 이용하여, 그들의 장기적 연금부채와 관련 비용에 대한 매년 보험수리적 추정을 실시한다. 이러한 가정이 해마다 변화하면서 이러한 추정치와 총원가가 매년 오르내리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변동이 있게 된다. 표 4는 이러한 가정의 변화와 관련된 총 손실이 2011 회계연도에는 281

억 달러였지만, 2010 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과 비교하여 1,050억 달러의 감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 퇴직군인부와 인사관리처 모두, 이러한 가정의 변화로 인해 각 기관의 총 순원가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11 회계연도에 재무부의 순원가가 2,880억 달러(77 퍼센트) 감소한 것이 정부 총 순원가의 감소의 또 다른 주된 원인이었다. 작년에 재무부는 선순위우선주매입 계약(SPSPA: Senior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 정책사업에 따른 정부보증기관에 대한 추정 총 미지급원가에 대한 우발부채를 기록하는 비용 관련 순원가 증가를 2,680억 달러로 기록했다.

정부보증기관에 대한 지출과 추정 손실 수정의 결과로 2011 회계연도의 예상부채가 437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2010년의 2,680억 달러의 부채증가(비용)와 비교하면 총 3,117억 달러가 감소한 결과를 낳는다. (표3 참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최종 결과”인 순운영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부의 총 순원가 3조 6,608억 달러에서, 세수 및 기타 수익 2조 3,638억 달러가 공제된다. 이전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세수와 기타 수익의 근소한 증가가 15퍼센트에 달하는 순원가의 감소와 결합하여 “최종 결과”인 순운영원가가 2011 회계연도에 약 1조3천억 달러(1조 3,126억 달러)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2010 회계연도의 순운영원가인 2조 1천억 달러와 비교하여 약 37퍼센트 혹은 7,677억 달러 감소한 것이다.

자산과 부채: “우리가 소유한 것과 우리가 빚을 진 것”

당기말 연방정부의 순포지션은 재정상태표(표 5에 요약)에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도출된다. 재정상태표는 세금을 부과하고, 상거래를 규제하며,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고유 권한의 재무적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상태표는 또한 정부가 수탁자의 역할을 하는 국가자원과 천연자원과 같은 비영업자원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도 제외한다.

Net Position Dollars in Billions	2011		2010		Increase (Decrease)	
	\$	%	\$	%	\$	%
Assets						
Cash & Other Monetary Assets	\$ 177.0		\$ 428.6		\$ (251.6)	(58.7%)
Loans Receivable and Investments, Net*	\$ 985.2		\$ 942.5		\$ 42.7	4.5%
Inventories	\$ 296.1		\$ 286.2		\$ 9.9	3.5%
Property, Plant & Equipment, Net	\$ 852.8		\$ 828.9		\$ 23.9	2.9%
Other	\$ 396.2		\$ 397.6		\$ (1.4)	(0.4%)
Total Assets	\$ 2,707.3		\$ 2,883.8		\$ (176.5)	(6.1%)
Less: Liabilities, comprised of:						
Federal Debt Held by the Public & Accrued Interest	\$ (10,174.1)		\$ (9,060.0)		\$ 1,114.1	12.3%
Federal Employee & Veterans Benefits	\$ (5,792.2)		\$ (5,720.3)		\$ 71.9	1.3%
Other	\$ (1,526.4)		\$ (1,576.3)		\$ (49.9)	(3.2%)
Total Liabilities	\$ (17,492.7)		\$ (16,356.6)		\$ 1,136.1	6.9%
Net Position (Assets Minus Liabilities)	\$ (14,785.4)		\$ (13,472.8)		\$ (1,312.6)	(9.7%)

*Includes Net Loans Receivable and Mortgage-Backed Securities,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 Investments, and Investments in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GSEs).

나아가 운영 및 순포지션 변동표와 마찬가지로 재정상태표는 특정 기금과 정책사업에 책정된 순포지션의 일부를 별도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게다가 정부의 미래의 사회보험 노출(즉,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과 기타 재정추정, 미수행채무, 우발채무와 같은 항목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노출은 재정상태표에 표시된 부채보다 광범위하다. 이러한 노출은 본 MD&A 부분과 본 보고서의 추가공시에서 논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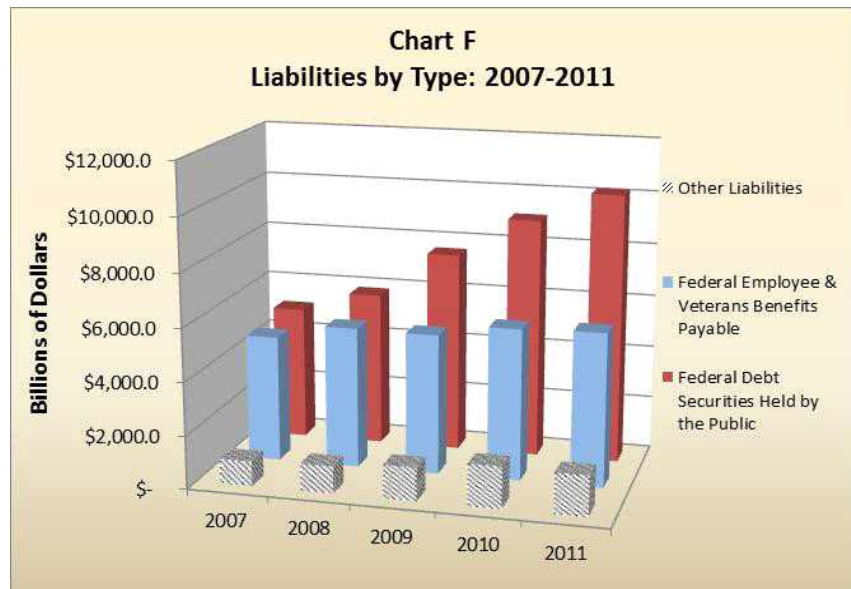
자산-“우리가 소유한 것”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정부는 약 2조7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유형자산순액(2011 회계연도에 8,528억 달러)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에 논의되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과 정부보증기관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한 투자액, 순대여금, 모기지담보증권으로 총 9,85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2011 회계연도에 정부의 총자산은 1,765억 달러 감소했는데 대부분 보완금융제도(SFP: Supplementary Financing Program)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현금예탁금의 제거에 따른 것이다. 보완금융제도 하에서 재무부는 특수채권을 발행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승인된 대출 및 유동성 정책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을 공급했다. 2010년 9월 30일의 2,000억 달러와 비교하여 2011년 9월 30일에 보완금융제도를 위해 책정된 미정산 현금관리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재정상태표에 기록된 자산과 함께 정부는 토지(국립공원과 삼림 등), 유산자산(국립기념비와 역사적 구조물 등)과 같은 그 외의 특정 수탁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공시한다.

부채-“우리가 빚진 것”

표 5와 도표 F에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최대 부채는 공공보유 연방정부채무와 발생이자로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잔액이 10조 2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정부 부채의 다른 주요 구성요소는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및 퇴직군인연금의 미지급액(미국 군인과 민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연금제도 및 기타 급여제도)으로 2011 회계연도동안 5조 7,203억 달러에서



5조 7,922억 달러로 719억 달러 혹은 1퍼센트 정도가 증가했다. 인사관리처는 2백 8십만 명의 현직공무원들과 2백 5십만 명의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의 민간연금제도를 운영한다. 군인연금제도는 3백만 명 이상의 현역군인(현역, 예비역, 주방위군 포함)과 약 2백2십만 명의 퇴직군인과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방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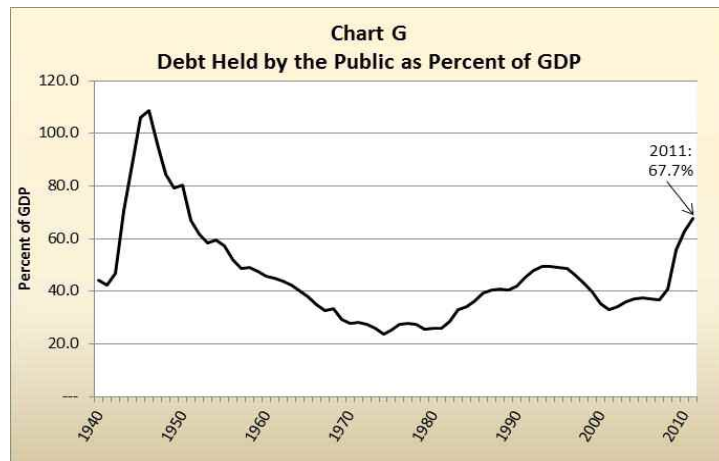
통합재정 흑자 혹은 적자는 해당 연도의 연방정부의 총지출액과 수취액(예, 세금)의 차이이다. 정부는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연방정부의 채무수준이 증가)한다. 재정흑자(수취액이 지출액을 초과)가 발생하는 시기에 정부는 통상 공공보유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초과자금을 사용한다. 통합 예산 및 기타 활동으로 인한 현금잔액 변동표는 연간통합재정 흑자 혹은 적자가 연방정부의 차입과 현금 및 기타 화폐성 자산의 변동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보고한다. 이는 또한 재정 흑자나 적자가 통상적으로 채무잔액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정부의 공공보유채무와 발생이자(정부의 재정상태표에 보고된 것처럼 증권, 어음, 채권과 같은 채무부 증권, 미상각 할인액과 미상각 할증액의 순액, 미지급발생이자로 구성된다. “공공”은 개인, 법인, 주정부, 지방정부, 연방준비은행, 외국정부와 연방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기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보유채무와 발생이자(정확히는 재정상태표상의 부채)이고 2011 회계연도 말에 총액이 약 10조2천억 달러였다. 이는 1조1천억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통 재정흑자는 차입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재정적자는 차입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의 채무운용은 여기서 나타내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다. 매해 수조달러의 채무가 만기에 이르고 신규 채무가 이를 대신해서 발행된다. 2011 회계연도에 신규 차입금이 8조 달러였으며, 6조9천억 달러의 공공보유 만기채무가 상환되었다. 이 둘은 2010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신규차입금과 채무상환이 소폭 감소했음을 나타냈다.

정부는 공공보유채무와 함께 정부의 한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부터 차입할 때 발생하는 정부간 미상환채무를 약 4조7천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신탁기금(2조7천억 달러)과 메디케어신탁기금(3,163억 달러)과 같이 채무부가 발행하고 정부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나타낸다. 정부간 채무는 여러 정부 부문이 주로 특수비시장성증권의 형태로 정부신탁기금에 보유하고 있다. 정부신탁기금의 수립법은 보통 신탁기금초과수취액(이자수익 포함)을 이러한 특수증권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금액은 채무부의 부채이면서 정부신탁기금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전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통합과정에서 상쇄될 것이다.(보고서의 주석 14 참고) 이러한 증권을 상환할 때, 즉, 미래의 사회보장급여를 지불할 때, 정부는 신탁기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취득해야 할 것이다. 공공보유채무와 정부간 채무의 합은 연방정부의 총 채무와 같은데, 이는 (조정된 이후에) 법적 한도(채무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11 회계연도 말에 법적한도를 적용받는 채무는 14조7,470억 달러였는데, 현재 한도인 15조 1,940억 달러에 비해 거의 4,500억 달러 낮은 수치이다.

1917년 이전에 의회는 각각의 채무의 발행을 승인했다. 1917년 1차 세계대전에 대한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는 연방정부의 차입에 대한 달러 한도를 설정했다. 1960년 이후에 의회는 채무한도를 상향하고, 일시적인 증가기간을 연장하고, 정의를 수정하기 위해서 79개의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채무한도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상승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1년 예산통제법(BCA)에 따라 2011년 8월 4,000억 달러 증가하여 14조6,940억 달러가 되었고 2011년 9월에는 5,000억 달러가 증가하여 15조1,940억 달러가 되었다. 예산통제법은 의회가 합동불승인결의안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한도적용을 받는 미상환채무가 채무한도의 1,000억 달러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후 15일 이후에 채무한도를 한 번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의 균형예산수정안의 기준을 위해서 각 주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다음 증가액은 1조2천억 달러가 될 것이다.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증가액이 1조5천억 달러가 될 것이다.



GDP에 대한 비율로 측정되는 공공보유 연방정부채무는 국가의 채무를 경제의 규모와 비교하여 채무와 경제규모의 변동 모두에 민감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GDP대비연방채무의 비율은 큰 폭으로 변화했다. 미국 역사의 대부분에서 GDP대비채무비율은 전시에는 증가하고 평시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패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도표 G에 나타난 것처럼 전시의 지출과 차입은 1946년 GDP대비채무비율을 사상최고치인 109퍼센트로 증가했으나, 전후시기에 급격히 감소하여 1950년에는 80퍼센트로 감소하고, 1960년에는 46퍼센트로 감소했으며, 1974년에는 전후최저점인 24퍼센트를 기록했다. 그 때 이후로 이 비율이 증가하여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 1990년대에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연방정부의 적자감소 조치와 구속력이 있는 “부과방식” 규칙의 시행과 같은 매우 중요한 재정결정을 내리면서 1990년대 동안 GDP대비연방채무의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여 19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최고치인 49퍼센트에서 2001년에 33퍼센트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부과방식 규칙이 종료되고, 상당한 감세가 이행되고, 수급권이 확대되었으며, 국방 및 국토안보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상당 부분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08년 9월, GDP대비채무의 비율이 GDP의 40퍼센트가 되었다. 최근의 경제, 재정위기로 인한 이례적인 요구와 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 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의 둔화가 합쳐져 2011년 GDP대비채무의 비율이 거의 68퍼센트까지 상승했다.

이전의 부분은 2011 회계연도의 연방정부의 재무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 부분은 정부의 경제회복노력을 논의하고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경제 회복 노력

본 부분은 2011 회계연도 말 경제를 개괄하고 재무부와 정부전체가 착수한 여러 중요한 회복노력을 논의한다.

2011회계연도의 경제

미국의 핵심거시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정부의 재무성과를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표 6에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경제는 속도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2011 회계연도에 성장을 계속했다. 민간부문 비농업 종사자수가 2010 회계연도에 35만 가까이 증가한 이후로 거의 1백9십만 명 증가하면서 일자리 증가가 가속화되었다. 실업률은 2011 회계연도에 감소했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FY2011	FY2010
Real GDP Growth	1.5%	3.5%
Residential Investment Growth	1.4%	-7.8%
Average monthly payroll job change (thousands)	158	29
Unemployment rate (percent, end of period)	9.1%	9.6%
Consumer Price Index (CPI)	3.9%	1.1%
CPI, excluding food and energy	2.0%	0.8%
Treasury constant maturity 10-year rate (end of period)	1.9%	2.5%
Moody's Baa bond rate (end of period)	5.2%	5.6%

* Some FY2010 data may differ from the FY2010 Report due to update and r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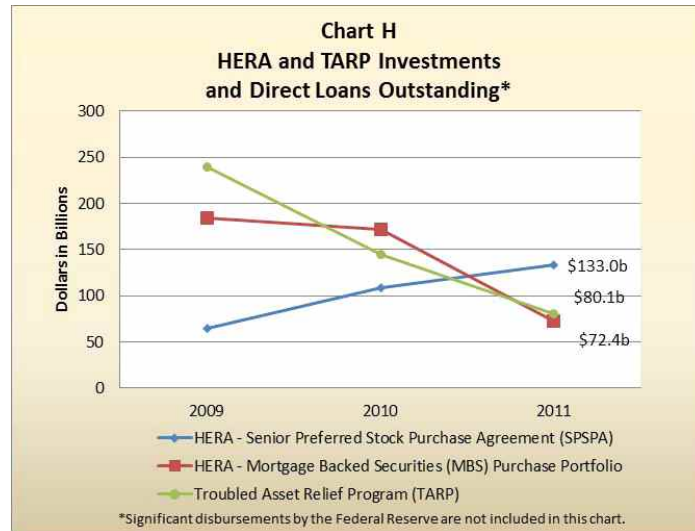
실질 GDP는 2010 회계연도에 3.5퍼센트 증가한 이후에 2011 회계연도의 사분기에 걸쳐 연평균 1.5퍼센트 상승했다. 분기별 성과는 실질 GDP가 2011 회계연도의 1/4분기에 2.3퍼센트 상승하고, 2/4분기와 3/4분기에 평균 0.8퍼센트 상승하고, 4/4분기에는 2.0퍼센트 상승하면서 복합적인 모습을 띠었다. 미국경제는 2011 회계연도에 총 1백6십만 개의 비농업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2010 회계연도에 추가된 11만8천개의 비농업 일자리 개수에 비해 크게 향상된 수치이다. 민간 부문에서 비농업 일자리는 전년도에 거의 35만개가 증가한 이후에 약 1백9십만 개 증가했다. 그래도 2011 회계연도에 실업률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0년 9월의 9.6퍼센트에서 2011년 9월 9.1퍼센트로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은 주로 에너지와 식료품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여전히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근원물가상승률(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비율) 또한 증가했으나, 역사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명목임금 증가세 둔화와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반영하여 실질 임금은 감소했다. 기업이익 수준은 2011 회계연도에 증가했으나, 이전 회계연도에 비해 더딘 속도로 증가했다. 연방정부의 지출액과 수취액의 증가는 2011 회계연도에 가속화했다. 그 결과, 연방정부의 통합재정적자는 1조 3천억 달러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GDP의 비율로는 2010년 9.0퍼센트에서 2011년 8.7퍼센트로 줄었다.

다음 핵심사항은 2011 회계연도의 경제성과의 개요이다.

- 소비자 지출은 2011 회계연도에 2년 연속으로 2.2퍼센트 증가했다. 그래도 분기별 성과는 2011 회계연도의 1/4분기에 3.6퍼센트라는 견고한 연간증가율을 기록하다가 3/4분기에 보다 낮은 0.7퍼센트의 연간증가율을 보였다.
- 주거용고정투자는 2011 회계연도의 사분기에 1.4퍼센트 증가하고 한 분기를 제외한 모든 분기에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1 회계연도에 회복되기 시작했다. 비주거용고정투자는 2010년에 7.7퍼센트 증가한 이후에 2011년에는 8.9퍼센트 증가했다.
- 2011 회계연도의 말까지 일자리의 증가속도는 완만했지만, 노동시장의 상황은 2011 회계연도에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2010 회계연도에 민간부문의 비농업일자리의 고용이 월평균 2만9천개가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여 2011년도 전체에 달마다 평균 15만8천개 증가했다. 2011 회계연도에 실업자수는 1,47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감소했다. 실업률은 2011년 9월 9.1퍼센트를 기록하여 2010 회계연도 말의 9.6퍼센트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1 회계연도 말의 실업률은 가장 최근에 기록한 최고치인 2009년 10월의 10.1퍼센트보다 1퍼센트 포인트가 낮아진 수치이다.
-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로 측정하는 전체물가수준은 에너지와 식료품가격 증가의 영향으로 2011 회계연도에 3.9퍼센트 증가했다. 2010 회계연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1.1퍼센트 증가했다. 근원물가상승률(식료품, 에너지 제외)은 2011 회계연도에 2.0퍼센트였는데 이전연도에는 0.8퍼센트였다.
- 금융시장의 상황과 금융위험의 측정치는 일반적으로 2011 회계연도에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 ✓ 보통위험의 채권에 대한 회사채 수익률은 2010년 회계연도 말에 10년 만기 채무부증권의 수익률보다 약 3.05퍼센트 높았다. 2011년도를 거치면서 스프레드는 점차 줄어들다가 4/4분기에 다소 증가하여 2011년 말에는 3.30퍼센트로 마감했다.
 - ✓ 3개월 리보금리(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와 3개월 채무부금리 간 차이가 2010 회계연도 말에 0.13퍼센트였다. 이러한 스프레드는 2011 회계연도에 증가하여 2011년 말에는 0.43퍼센트로 마감했다.

정부의 안정화 노력에 대한 검토

3년 전, 미국 금융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있었고 많은 주요 금융기관은 파산의 위험에 있었다. 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2차 대공황을 겪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다.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와 다른 미국 정부기관들은 당시에 붕괴 가능성을 피하고 여러 정책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여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3년 후, 정부가 위기시 제공했던 이례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상당한 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표 H는 핵심경기회복사업과 관련된 투자 자산과 직접대출금의 미상환잔액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 (HERA)

2008년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HERA: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은 주택 분야의 정부보증기관(GSEs), 주택저당공사, 대출저당공사와 연방주택융자은행을 규제하기 위해서 연방주택금융국이라는 신규 규제기관을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주택금융국은 정부보증업체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러한 정부보증기관이 건전하고 지급능력이 있는 재정상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저당공사와 대출저당공사를 정부관리체제 하에 두었다.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HERA)에 따라 재무부는 정부보증기관의 지급능력과 유동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에 착수했다.

- 주택저당공사, 대출저당공사와의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s) 체결
- 정부보증기관의 모기지담보증권 매입 정책사업의 실시(2009년 12월 31일 만료)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s)의 목적은 행정부와 의회가 정부보증기관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동안 이러한 기관이 지급능력을 유지하고 주택저당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연방주택금융국이 어느 한 정부보증기관의 부채가 각각의 자산을 초과한다고 판단한다면, 정부가 이들 정부보증기관에 사전기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보증기관 자금은 상한선 공식에 따라 지급되는데, 이 공식은 어느 한 정부보증기관이 실현하는 일체의 누적손실액에 따라 분기별로 상향조정되고 누적수익에 따라 하향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보증기관당 2,000억 달러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으며, 2012년 12월 31일에 고정될 것이다. 당시에 남은 약정액은 고정될 것이며, 계약 조항에 따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재무부는 주택저당공사와 대출저당공사에 총 1,690억 달러의 누적지급액을 주택저당공사와 대출저당공사에 제공했으며, 이 금액은 1,330억 달러의 공정가치로 정부의 재정상태표에 반영되었다.(도표 H 참고) 게다가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s)의 정부보증기관에 대한 미래투자액의 우발부채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2,680억 달러 증가한 이후에 2010 회계연도에 440억

달러 감소했으며, 2011년에는 총 3,162억 달러가 발생했다. 2010 회계연도에 이러한 부채가 상당히 증가한 것은 주로 정부보증기관의 추정데이터의 접근가능성이 향상되고 2009년에 각각의 정부보증기관의 유동성 상한선이 수정된 영향에 따른 것이다. 2011 회계연도의 감소는 정부보증기관에 대한 지불금액과 정부보증기관의 향후예상손실의 감소를 반영한 새로운 추정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보증기관의 모기지담보증권매입정책사업은 현재 및 미래 주택소유자들의 주택저당기금의 이용을 확대하고, 주택저당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되었다. 2008년 10월에서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재무부는 기관의 모기지담보증권 2,250억 달러를 매입했다. 2011년 3월, 재무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달 모기지담보증권 포트폴리오를 최대 100억 달러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매각과 선지급의 결과로 잔여 모기지담보증권 포트폴리오는 2010년 회계연도 말에 1,722억 달러에서 2011 회계연도 말에 724억 달러로 절반 이상이 감소(도표 H 참고)했으며, 재무부의 최초 매입금과 비교해서 3분의 2 이상이 감소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매입과 재무부의 노력으로 모기지담보대출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주택시장에 유동성과 안정성이 공급되었다.

긴급경제안정화법(EESA),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재정안정국(OFS)

2008년 제정된 긴급경제안정화법(EESA)은 미국금융시스템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수단을 재무부장관에게 제공하였다. 주택가치, 학자금마련펀드, 퇴직자금계좌, 노후대비저축을 보호하고 주택소유권을 유지하고,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미국납세자의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러한 권한의 행사에 대한 공적인 회계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경제안정화법(EESA)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를 실시하기 위해서 재무부 내에 재정안정국(OFS: Office of Financial Stability)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은 기업, 개인, 주정부, 지방정부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재개하도록 하여 다른 연방정부의 조치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자본 및 신용시장의 경색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긴급경제안정화법(EESA)은 본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가 부실자산을 최대 7,000억 달러까지 매입하거나 보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다. 2010년 다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은 TARP의 누적권한을 4,750억 달러로 낮추었다. 2010년 10월 3일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하에서 자산을 새로 위탁할 수 있는 재정안정국(OFS)의 권한이 종료되었다. 2011 회계연도에 재정안정국(OFS)은 주로 잔여투자금액을 적절한 시기에 질서 있게 회수하고, 납세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주택소유자들이 예방 가능한 유질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 미국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위해서 실시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은 이제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총 2,450억 달러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하의 여러 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에 투자되었는데, 이 정책사업이 처음 실시된 시점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재정안정국(OFS)은 상환금, 배당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약

2,580억 달러를 회수했다.

- 재정안정국(OFS)은 제너럴모터스사의 신규상장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제너럴모터스사에 대한 지분을 50퍼센트 줄이고, 크라이슬러 그룹이 만기 6년 전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서 크라이슬러그룹에 대한 투자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 나아가 재정안정국(OFS)은 다른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AIG의 주요 구조조정 계획을 종료하여 AIG의 회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AIG에 대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되었다. 2011년 5월, 재무부는 재정안정국(OFS)과 일반기금(General Fund)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AIG 보통주 1억3천2백만 주와 6천8백만 주를 완전히 매각했다. 2011년 9월 30일, 재정안정국(OFS)은 AIG 보통주 9억6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반기금은 추가로 4억9천5백만 주를 보유하여 결과적으로 AIG 사외주의 총 소유비율은 약 77퍼센트가 되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참여기업의 개선된 재정상태, 예정보다 이른 자산 환매, 프로그램의 이용도 감소와 신중한 관리로 인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전체 실시기간의 추정원가가 예산 기준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3,140억 달러(전체 TARP 권한인 7,00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에서 2010년 2월 1,170억 달러(7,000억 달러의 TARP 권한에서 5,46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로 감소했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의 가장 최근의 추정치는 4,700억 달러의 TARP권한에 대한 702억 달러의 생애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계획한 모든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이러한 예산기준 추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의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재무제표에 보고된 원가와와는 다르며, 주택정책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사업에 대해 약정되었으나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금은 모두 예산 목적으로 예상생애비용에 포함된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설립(2008년 10월 3일) 이후 2011년 9월 30일까지의 원가는 재정안정국(OFS)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것처럼 280억 달러였다.

재정안정국(OFS)은 설립 이후 2011년 9월 30일까지 직접 대출, 투자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하의 재무부 주택정책사업으로 4,134억 달러를 지출하고, 상환 및 매각으로 2,769억 달러를 징수했으며, 이자와 배당금 현금수익과 초과한 자산의 매각 및 환매수익으로 거의 400억 달러를 보고했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은 총 미상환직접대출액과 지분투자액으로 1,22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801억 달러를 가치를 갖는다.(도표 H 참고)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원가추정은 적용 가능한 경우에 현재 시장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미상환 TARP 투자액의 최종원가는 다른 무엇보다 경제, 금융시장, 특정기업의 성과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와 다른 관련 정책에 대한 그 밖의 정보는 www.financialstability.gov에서 볼 수 있다.

회복 법안

2009년 봄 이후 경제, 금융전망이 개선된 것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주택경기 및 경제 회복법안(HERA) 및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하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실시한 그 밖의 금융안정정책, 순응적인 통화정책, 2009년 미국회복재투자법안(ARRA)를 반영한 결과이다. 본래 7,870억 달러규모였던 ARRA 종합법안의 목적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유지하는 것이다. ARRA의 3분의 1은 기업과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3분의 1은 경기침체의 최대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긴급구제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3분의 1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투자에 할당되었다. 연방기관이 지급한 누적 ARRA 금액은 2010년 9월 30일 기준의 3,079억 달러와 비교하여 2011년 9월 30일에는 총 4,2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기관들과 민간부문의 지출액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독자들은 이러한 자금의 사용용도와 사용방식에 대한 최신정보를 www.recovery.gov에서 찾을 수 있다.

장기 재정 전망: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정부의 시급한 우선과제는 계속해서 경제회복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다 장기적인 재정적 과제가 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수명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건강보험료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제도과 같은 핵심적인 사회제도의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본 재정보고서의 중요한 목적은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이 현재의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개혁의 시급성과 규모를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정책은 국내총생산대비 공공보유부채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은 장기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만 고려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의 공정성이나 내포된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논의된 추정치는 현 정책이 무기한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공공보유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도출한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은 예상이나 예측이 아니다. 정책변화를 제정하는 경우에 실제 재정결과는 물론 추정치와는 달라질 것이다.

본 보고서의 추정치는 현재의 정책궤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GDP대비 부채의 비율이 2086년에 287퍼센트에 이르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75년간 지출과 수입의 격차(“75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해당기간동안의 GDP의 1.8퍼센트에 이르는 지출감소와 수입증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격차의 정확한 규모는 상당히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재정정책이 무기한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의 재정불균형에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을 미룬다면 GDP대비 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지출감소나 수입증가의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75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혁의 규모는 75년 중 마지막 55년에 개혁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면 개혁이 75년에 걸쳐 실시되는 것에 비해 60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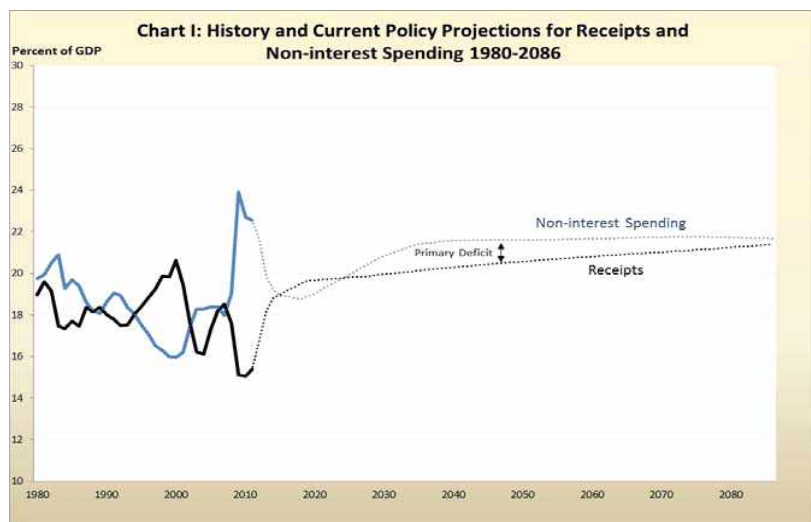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정책이 GDP(혹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정책지연에 따른 비용을 추정한다. 지나치게 급격한 적자감소로 인해 경기회복이 둔화된다면 역효과를 낼 것이다. 단기적으로 적자감소와 경제성장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자, 이자 및 부채

무이자지출액과 수취액의 차이인 근본적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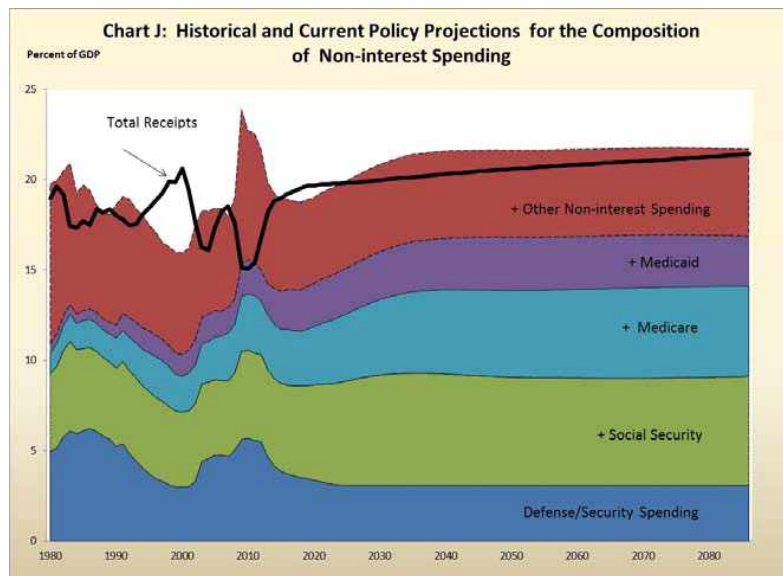
대비 공공보유채무의 비율의 결정요인이다. (그 외의 결정요인은 금리와 GDP 증가율이다.) 도표 I는 수취액, 무이자 지출액과 그 차액인 근본적자를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 GDP대비 근본적자의 비율은 2009년 급격히 증가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및 이 둘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2011년 예산통제법에서 요구하는 지출감소가 효력을 나타내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GDP대비 근본적자의 비율은 2012년에서 2019년 사이에 급격히 하락(2015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에서 2035년 사이에 지속적인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사회보장제도 및 보건사업지출액이 증가하면서 근본적자나 근본흑자가 꾸준히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에 근본적자는 다시 발생하여 2035년에 GDP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2035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영향이 사라지면서 GDP대비 근본적자의 추정비율이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2035년과 2086년 사이에 근본적자는 평균적으로 GDP의 0.9퍼센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GDP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침체와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및 2010년 세금 구제, 고용보험 권한 및 직업창출법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에서 제정된 감세로 인해서 2009년과 2010년에 상당히 감소했고, 2011년에는 소폭 증가했다. 이 비율은 경제가 회복되고 일시적 세금감면이 만료되면서 다시 장기적 평균치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보다 높은 개인소득세 범위에 속하는 납세자의 수와 소득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취액이 GDP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의회와 대통령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소득부분을 증가시키지 않는 법안을 계속해서 제정함을 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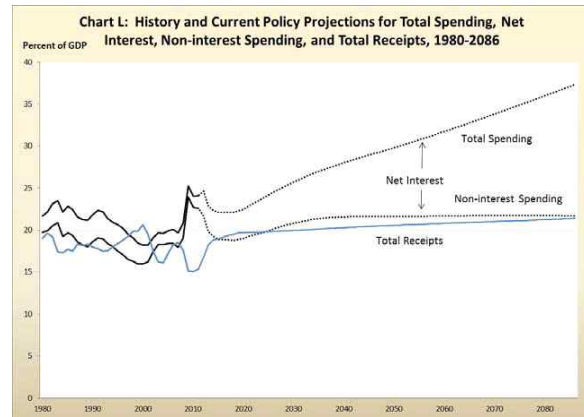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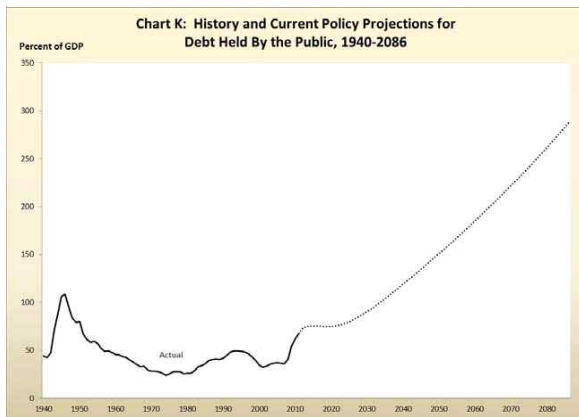


GDP에서 무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22.6퍼센트 수준에서 2013년에 약 20퍼센트로 감소하고 2026년까지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거나 하락하다가 그 후에 점차 상승하여 2040년경부터는 약 22퍼센트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2년간 GDP에서 무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는 주로 예산통제법(BCA)으로 제정된

재량지출의 상한선 설정과 추가적인 자동지출삭감에 따른 것이고, 이후의 증가는 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도표 J 참고) 향후 25년간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4, 1.3, 1.0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5년 이후에는 GDP에서 사회보장제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속도가 점차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의 증가추정치를 2009년 재무보고서의 추정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추었다. 그러나 추정하고 있는 비용절감, 생산성 개선, 의료인의 급여수준의 감소가 시간경과에 따른 추정된 원가 증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리와 GDP의 추정치와 더불어 도표 I에 제시된 근본적자의 추정치는 도표 K에 나타난 GDP대비 공공보유 채무 비율의 추정치를 결정한다. 이 비율은 2011 회계연도 말에 68퍼센트였고 현행정책 하에서는 2022년에 76퍼센트, 2042년에는 125퍼센트, 2086년에는 287퍼센트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GDP대비 채무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해에서 다음해까지 공공보유부채의 변화는 본래 총 지출액(무이자 지출과 이자지출의 합으로 구성)과 총 수취액의 차액인 통합재정적자와 동일하다. 도표 L은 총 지출과 통합적자의 급격한 증가가 거의 전적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추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이자지출은 2011년 GDP의 1.5퍼센트였고, 현재의 정책 하에서 2031년에는 5퍼센트가 되고 2086년에는 거의 16퍼센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의 추정치는 2010년 재무보고서의 추정치보다 다소 긍정적이다. 작년의 보고서는 GDP대비 채무의 비율이 2085년에 352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올해의 보고서는 283퍼센트로 추정하고 있다. 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된 것은 주로 2011년 예산통제법이 요구하는 지출감소가 다소 덜 긍정적인 경제, 기술적 추정에 의해 부분 상계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재정격차와 정책개혁의 지연비용

GDP대비 채무 비율이 향후 75년간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평균 GDP의 1.1퍼센트가 되는 근본흑자를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 정책 하에서 GDP의 0.7퍼센트를 차지하는 평균근본적자와 대비된다. “75년의 재정격차”라고 하는 이 차이는 GDP의 1.8퍼센트이며, 향후 75년간 추정세입과 무이자지출액의 현재가치의 약 9퍼센트이다.

Period of Delay	Change in Average Primary Surplus
No Delay: Reform in 2012	1.8 percent of GDP between 2012 and 2086
Ten Years: Reform in 2022	2.2 percent of GDP between 2022 and 2086
Thirty Years: Reform in 2032	2.8 percent of GDP between 2032 and 2086

Note: Reforms taking place in 2011, 2021, and 2031 from the 2010 Report were 2.4, 2.9, and 3.7 percent of GDP.

표 7은 서로 다른 날짜에 시작한 세 가지 재정격차해소정책을 비교하여 재정격차해소정책의 지연비용을 나타낸다. 첫 번째 정책은 바로 시작한다. 이 정책은 2012년과 2086년 사이에 매년 GDP의 1.8퍼센트만큼 근본흑자를 증가시킨다. 이는 매년 평균 GDP의 1.8퍼센트에 이르는 지출감소와 수입증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달성할 수 있다. 표 7에 나타난 두 번째 정책은 2022년에 시작된다. 2011년에서 2021년 사이에 부채가 줄지 않고 감소하며, 동일한 재정통합이 10년 적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75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2년과 2086년 사이에 매년 근본흑자가 GDP의 2.2퍼센트만큼 상승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2032년에 정책변화를 실시한다면 근본흑자가 2032년부터 2086년 사이에 매년 GDP의 2.8퍼센트만큼 증가해야 75년의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2022년과 2032년에 시작한 근본흑자 증가(각각 GDP의 2.2퍼센트와 2.8퍼센트)와 2012년 시작한 근본흑자 증가(GDP의 1.8퍼센트)의 차이가 정책지연이 미래세대에 부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의 추정치이다. 미래세대는 생애에 걸친 근본흑자가 클수록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그들이 혜택을 받는 계획적인 지출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정책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결론

미국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ACA)과 2011년 예산통제법(BCA)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의 장기적 상승추세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예산통제법은 재량지출을 상당히 줄인다. 모두 합하여 이 두 법안은 장기적 재정격차의 추정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도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GDP대비 채무의 비율은 향후 75년과 그 이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의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경기회복을 둔화시킬 정도로 정책변화가 너무 급격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경고에 따라서 이러한 동향을 피하기 위한 정책을 빨리 마련할수록 미국의 재정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증가나 지출감소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현재 정책 하에서의 지출액과 세입의 추정은 상당히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정책이 무기한 지속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것과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다른 문제들이 본 보고서의 보충정보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사회보험보고서(SOSI)-계속되는 어려움

정부의 장기적 재정추정에 대한 이전의 분석은 정부의 수취액과 지출액 전체를 고려했다.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철도공무원연금, 진폐증보상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의 “사회보험”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다 집중된 관점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사회보험보고서(SOSI)는 (1) 현재와 미래 가입자들로부터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될 모든 미래의 정책사업 수입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주로 세금과 보험료이며, 이자는 제외), (2) 현재와 미래 가입자들에게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지급될 미래의 예정된 지출추정액, (3) (1)과 (2)의 차이를 보고한다.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보고되고 본 보고서의 보충정보에 포함되는 금액은 각 정책사업의 공식적 보험수리적 산출결과를 근거로 한다. 회계 관행에 따라 일반수입의 양도는 정부전체 수준의 재무제표의 통합과정에서 상계되고, 메디케어 B와 D 부분에 대한 지출액은 산출에 포함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수입은 이러한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보고서(SOSI) 정책사업과 금액은 비록 약간 다른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전 부분의 보다 포괄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에 포함된다.(본 보고서의 보충 부분에 설명)

Dollars in Billions	2011		2010		Increase / (Decrease)	
	\$	%	\$	%	\$	%
Open Group (Net):						
Social Security (OASDI)	\$ (9,157)		\$ (7,947)		\$ 1,210	15%
Medicare (Parts A, B, & D)	\$ (24,572)		\$ (22,813)		\$ 1,759	8%
Other	\$ (101)		\$ (97)		\$ 4	-4%
Total Social Insurance Expenditures, Net (Open Group)	\$ (33,830)		\$ (30,857)		\$ 2,974	10%
Total Social Insurance Expenditures, Net (Closed Group)	\$ (46,273)		\$ (43,057)		\$ 3,217	7%
Social Insurance Net Expenditures as a %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Open Group	2011	2010				
Social Security (OASDI)	-1.0%	-0.9%				
Medicare (Parts A, B, & D)	-2.8%	-2.7%				
Other	0.0%	0.0%				
Total (Open Group)	-3.8%	-3.7%				
Total (Closed Group)	-5.3%	-5.1%				

Source: Statement of Social Insurance (SOSI). Amounts equal estimated present value of projected revenues and expenditures for scheduled benefits over the next 75 years of certain 'Social Insurance' programs (e.g., Social Security, Medicare). 'Open Group' totals reflect all current and projected program participants during the 75-year projection period. 'Closed Group' totals reflect only current participants.

* GDP values from the 2011 & 2010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rustees Reports represent the present value of GDP over the 75 years. As the GDP used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differ slightly in the Trust Fund Reports, the two values are averaged to estimate the 'Other' and Total Net Social Insurance Expenditures as % of GDP.

Note - some totals may not equal sum of components due to rounding.

사회보험보고서(SOSI)는 사회보험정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추정위험노출과 추정 원가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출액이 정부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지만, 현재법의 사회보험정책사업 조항의 지속성을 가정한다면 미래에 원가와 부채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사회보험 신탁기금은 관련된 정책사업의 전체 수입과 원가를 차지한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세금, 보험료와 기타 수익은 기금의 대변에 기록된다. 기금은 급여지급과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만 지출될 수 있다. 일체의 초과수입은 시장금리로 특수비시장성 미국 정부증권에 투자된다. 신탁기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이전 프로그램 흑자 전체의 누적 가치를 나타내고, 미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자동적인 자금지원 권한을 제공한다.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보고된 금액을 요약해놓은 이전 페이지의 표 8은 “개방형 집단”에 대한 사회보험 순지출액이 2011년 1월 1일에 약 34조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보고서의 추정금액인 31조 달러보다 순지출액이 약 3조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표 9는 2011 회계연도에 사회보험 추정액의 변동의 주요원인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전연도로부터의 변화는 대

Dollars in Billions	
Net Present Value (NPV) - Open Group (FY 2010)	(30,857)
Change In:	
Valuation Period	\$ (1,518)
Demographic data and assumptions	\$ (859)
Economic data and assumptions	\$ (145)
Law or policy	\$ (14)
Methodology and programmatic data	\$ 56
Economic and other healthcare assumptions	\$ (463)
Change in projection base	\$ (31)
Net Change in Open Group measure	\$ (2,974)
NPV - Open Group (FY 2011)	(33,830)

부분 평가기간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다. 75년의 추정기간에서 평가기간의 변동은 이전연도로부터의 최초추정연도를 현보고연도의 새로운 75번째 연도로 대체하는 것의 영향을 측정한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인구학적(출생, 사망, 이민), 경제적(과세소득, 실업, 이자율) 가정의 변화이다. 사회보장청(SSA)에서 운영하는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제도에서 최대 변화요소는 인구학적 가정의 변화이다. 메디케어 프로그램(A, B, D 부분)에서 최대 변화요소는 평가기간의 변동과 경제적 가정의 변화이다.

2010 회계연도 미국 정부 재무보고서에 제시된 것처럼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조항을 반영하여 메디케어의 추정원가가 상당히 감소했다. 작년과 올해 주석 26호에 보고된 것처럼 건강보험원가 증가의 감소추정이 완전히 달성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주석 26호는 메디케어 추정원가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대체적인 추정을 포함한다. 이전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감사원(GAO)은 이와 같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2011년과 2010년의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건강보험료의 증가가 여전히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신탁기금보고서에서 매년 분석하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 재정상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개혁법(ACA) 프로그램의 변동사항을 완전하게 시행한다는 가정을 포함하여 현행 법 하의 메디케어 신탁기금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액은 2011년 GDP의 3.7퍼센트에서 2035년 GDP의 5.6퍼센트, 2085년 GDP의 6.2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입원보험(HI: Hospital Insurance) 신탁기금은 2024년부터 지불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보고서의 추정치보다 5년 앞당겨진 것이다. 2024년 이후에 세수가 급여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2050년에는 76퍼센트로 감소했다가 2085년에는 88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보장제도(노령·유족·장해보험: OASDI)의 경우, 총 지출액은 현재 수준인 GDP의 4.8퍼센트에서 점차 상승하여 2035년에는 6.2퍼센트를 기록하고, 2050년에는 약 6.0퍼센트로 감소했다가 208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장제도 신탁기금보고서는 신탁기금자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의 연간수입이 연간비용을 초과하고 신탁기금자산이 2023년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2023년이 되면 전기 신탁기금보고서에서 추정된 것보다 1년 이른 2036년에 신탁기금자산이 고갈될 때까지 지출액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신탁기금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신탁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세수로 2036년에는 예정된 급여의 77퍼센트를, 2085년에는 급여의 74퍼센트를 지급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전에 논의하고 신탁기금보고서에 언급한 것처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타가고 있음이 명백하다. 신탁기금보고서에 제시된 그 밖의 정보는 본 보고서의 보충정보부분에서 볼 수 있다.

시스템, 통제, 법령 준수

시스템

연방정부기관이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는 동안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시스템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진전은 있었다. 2011 회계연도에 연방재정관리개선법(FMIA: Federal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Act) 준수를 보고한 기관은 17개 기관이었고, 연방재정관리개선법(FMIA) 준수를 보고한 감사인의 수는 2010회계연도의 14명과 비교하여 감소한 13명이었다. 매해 보고되는 연간 준수건수는 연방정부 전체에 걸쳐 재정관리관행을 현대화하기 위한 현 정책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통제

연방정부 관리자들은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개발하고 유지할 근본적인 책임을 갖는다. 효과적인 내부통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신뢰할만한 재무보고, 적용법규의 준수라는 세 가지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이 정직하게 관리되고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산의 보호는 각 목표의 하위요소이다.

예산관리처(OMB)회람 A-123호 “관리자의 내부통제 책임”은 31 미국헌법 3512(c), (d)의 규정(보통 연방관리자재정규율법(FMIA: Federal Managers' Financial Integrity Act)로 알려져 있음)을 시행하는 정책문서이다. 회람 A-123호는 주로 기관에 위협을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회람은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목표를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는 여러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 부록 A는 기관관리자들이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평가, 기록, 검사, 보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부록 B는 기관이 정부의 신용카드 프로그램의 사기, 낭비, 오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내부통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부록 C는 부적절한 지급의 측정, 보고, 회복, 개선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지급 제거 및 회복법안(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에서 수정한 부적절한 지급정보법안(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의 규정을 이행한다.

2011 회계연도의 기관재무제표감사결과와 더불어 최고재무책임자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 기관의 중요한 결함의 수가 31개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효과적인 내부통제는 기관차원만이 아니라 정부전체 차원의 과제이기도 하다. 감사원(GAO)은 정부전체의 차원에서 중요한 결함으로 인해 재무보고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여러 기관과 정부 전체에서 내부통제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법령 준수

연방정부기관은 할당예산액, 고용, 보건 및 안전, 기타사항을 포함한 광범위한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준수책임은 주로 기관관리자들이 갖게 된다. 기관의 재무제표 감사의 일부로 법률 준수를 다루게 된다. 기관의 감사인은 재무보고와 관련된 선별된 법규를 준수했는지를 검사한다. 이러한 예들 중에 정부 전체의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감사원(GAO)은 법규준수 업무가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중요한 결함과 범위제한에 의해서 한정되었다고 보고했다.

재무관리 진행사항 및 우선순위

관리에산처(OMB) 내의 연방재무관리국(OFFM: Office of Federal Financial Management)는 연방정부의 재무관리 정책을 담당하고, 정부전체의 재무관리의 우선순위를 관리한다. 이 부분은 최근의 진행사항을 요약하고 향후 성과개선을 위한 몇 가지 핵심정책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1990년에 최고재무책임자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이 통과된 이후에 연방정부 재무담당조직은 강력한 회계 및 재무보고관행을 정착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최고재무책임자법(CFO Act)이 통과된 후 20년이 더 된 2011년 현재, 최고재무책임자법(CFO Act)에 따르는 24개 기관 중 23개 기관이 독립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지난 20년간 점점 더 많은 수의 연방기관이 통제되고 일관된 재무보고운영을 시작, 유지하고, 재무보고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실시하며, 거래 처리 및 회계기록을 성공적으로 통합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재무제표의 감사결과가 개선되었다. 24개의 주요 “최고재무책임자법(CFO Act)” 기관 중에 21개 기관이 적정의견을 받았고, 2개 기관이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한 개 기관만이 의견거절 상태로 남아있다. 게다가 감사인이 발견한 중요한 결함의 수가 31개로 2001년 초에 발견된 61개의 중요한 결함에 비해 그 수가 약 50퍼센트 감소했다.

지난 20년간 달성한 성과의 토대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관리예산처(OMB) 회람 A-123호 “관리자의 내부통제 책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재무관리 조직은 성공적인 재무보고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적인 규율과 재무관리 규율을 통합하여 이러한 보고 문제에 전체적으로 접근했다. 연관된 프로그램과 거래의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할 때, 연방정부의 재무관리에 진전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지속적인 어려움

위에서 언급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무관리 성과에 중대한 격차가 남아있다. 기본적인 재무관리 관행의 결함과 다른 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주요기관과 정부 전체가 계속해서 감사의견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효과적인 재무운영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재무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높고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연방기관이 연방정부의 자금사용내역에 대한 실시간의 투명성에 대한 새롭고 점차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했지만, 이러한 해결책을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연방정부 기관은 2011 회계연도에 부적절한 지급으로 약 1,150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장부에 수천 가지의 불필요한 부동산자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낭비의 사례는 연방정부사업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해로운 비효율을 초래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게 된다. 그러나 이하에 요약된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고 정부가 보다 나은 위치에 있게 되었다.

개선정책

고위급 정부 재무관리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재무관리 사업에 투자된 모든 금액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중요한 적이 없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 분야가 연방정부 재무관리조직의 최우선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 **낭비의 근절:** 대통령은 낭비근절캠페인(Campaign to Cut Waste)을 작년 여름부터 실시하여 비용을 감소하고 효율성을 발견하고 실시하며, 정부전체에서 낭비가 되는 지출을 근절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장부에서 불필요한 부동산을 제거하고 부적절한 지급을 제거하는 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기술격차 해소:** 연방정부는 보조금조직을 통합하고 연방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주, 지역 활동에 대한 감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월에 대통령은 관리예산처(OMB)가 연방정부의 보조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지시하는 각서를 발표했다. 게다가 재무보고와 회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솔루션에 대한 고비용의 장기적 투자를 재고하여 기업의 핵심요구를 충족하고, 운영효율을 촉진하며, 비용효율적인 분야에서 공동의 서비스 솔루션을 활용하는 단기적인 저비용의 관리가 보다 용이한 솔루션을 대신 선택해야 한다.
- **개방형 정부를 통한 책임 및 혁신 강화:** 납세자와 정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더욱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 보고되는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연방정부 재무관리조직의 경계를 넘어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계자들과 특히 일반인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해결책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낭비의 근절

- **낭비근절 캠페인:**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발견하고 실시하며, 구시대의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하고 정부 전반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2011년 6월에 낭비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낭비근절 캠페인을 수립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책임 있는 정부의 달성”이라는 행정령 13576은 모든 기관이 이미 달성한 성과개혁 및 관리개혁의 이익을 강화하고, 낭비가 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추가

적인 개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며, 연방정부 전체에 본보기가 되도록 이러한 개혁을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대통령은 기관이 2013 회계연도까지 2010 회계연도 수준에서 20퍼센트만큼 낮은 수준으로 특정행정비용을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효율적 소비촉진”에 관한 행정령을 발표했다. 각 기관의 최고재무책임자는 주로 이러한 절약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최고재무책임자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대통령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낭비근절캠페인 하의 이러한 노력이 2013 회계연도까지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방정부의 부동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촉진:* 행정부는 부동산 자산 관리를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는 미국 최대의 부동산소유자이지만, 일부 자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행정부는 연장정부의 장부에서 불필요한 부동산을 제거하고 부동산관련 운영원가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6월 10일,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관이 잉여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 정부 부동산과 관련하여 3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하는 “불필요한 연방정부 부동산의 처분-매각 수익 증가, 운영원가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 현재까지 연방정부 기관은 연간운영원가의 감소, 소유 및 임대건물 내의 공간 통합을 통한 제곱피트 면적의 감소, 재택근무의 영향 증가, 소유부동산의 매각,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같은 조치를 통해 대통령이 제시한 30억 달러의 목표 중 15억 달러를 파악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인 비용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2012회계연도 예산에 민간부동산재편성법(Civilian Property Realignment Act)을 도입했다. 이 제안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여 연방정부의 민간부동산 재고를 감소시키고 재편성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행정적 관료주의를 배제하고, 관계자들의 오랜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며, 연방정부 부동산을 처분, 통합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재정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행정부는 대통령의 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확장하면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부동산위원회(Federal Real Property Council)와 부동산자문위원회(Re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와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관련 비용절감 노력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
- 부적절한 지급에 대응:* 2010년 부적절한 지급 제거 및 회복법안(IPERA: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에 의해 수정된 2002년 부적절한 지급 정보법안(IPIA: 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은 부적절한 지급위험에 대비하여 모든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자금을 평가하고, 매년 지급금의 정확도를 측정하며, 오류를 감소, 제거하고 초과지불금을 회수를 위한 개선에 착수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부적절한 지급에 대응하는 것은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의 중심적인 요소이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부적절한 지급감소에 대한 행정령 13520, 부적절한 지급을 재적발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강화, 확대에 대한 대통령각서, 부적격 수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급불가목록(Do Not Pay List)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를 발행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또한 부적절한 지급 정보법안(IPIA)을 수정하는 2010년 부적절한 지급 제거 및 회복법안(IPERA)이 법률로 제정

되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에 이미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1 회계연도에 기관이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보고된 정부 전체의 오류율은 4.69퍼센트로 2010 회계연도의 5.29퍼센트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오류율이 현재 행정부 하에서 최초로 부적절한 지급을 보고한 2009 회계연도의 5.42퍼센트처럼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2011 회계연도에 보고된 부적절한 지급 추정액은 180억 달러가 더 낮다. 나아가 기관들은 2011 회계연도에 계약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액으로 12억 달러 이상을 재적발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는 2010 회계연도에 재적발된 금액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기관의 부적절한 지급과 행정부의 부적절한 지급정책에 관한 그 외의 정보는 PaymentAccuracy.gov에서 찾을 수 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 격차 및 기술 격차의 해소

- 보조금 관리의 개선:** 매해 연방정부는 주정부, 지방정부, 부족정부, 대학, 기타 비영리 기구에 대해 연방정부예산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5,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연방재무관리국(OFFM)은 보조금 신청서와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시스템인 grants.gov를 현대화하여 보조금 절차를 효율적이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관련조직과 협력하고 있다. 2011년 2월 28일에 대통령은 관리예산처(OMB)가 연방정부 안팎의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관리예산처의 회람을 검토하고 연방정부 보조금제도의 성과를 개선하면서 수령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각서를 공표했다. 연방재무관리국(OFFM)은 두 차례의 실무단회의를 개최했는데 한 번은 주, 지방, 부족의 비용원리가 감사규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른 하나는 대학교의 동일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두 실무단의 권고사항이 8월 말에 관리예산처(OMB)에 제출되었다. 2011년 10월 27일 관리예산처(OMB)는 M-12-01을 발행하여 보조금관련 조직이 연방정부 보조금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차원의 리더십을 제공하는 재정원조개혁위원회(COFAR: Council on Financial Assistance Reform)를 설립하였다. 재정원조개혁위원회(COFAR)는 보조금관련 조직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러한 개혁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재무시스템의 현대화비용 감소:** 연방정부의 재무제표 운영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재무시스템 현대화에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현대적 시스템은 일단 보급되면 일관되게 우리의 업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한다. 2010년 6월, 관리예산처(OMB)는 최고재무책임자법 기관의 재무시스템 계획의 즉각적인 검토와 승인을 앞두고 이러한 계획에 대한 활동을 중단시켰다. 현재까지 총 21개 기관이 검토되었고 기관들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을 명확한 실현가능 목표를 가진 보다 작고 단순한 부분으로 분리하고, 가장 중대한 업무 요구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이고 투명한 사업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시스템 계획을 재배치했다. 이러한 재배치로 인해 검토된 일부 정책사업의 원가가 절감되었다. 기관의 재무시스템 사업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위험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나아가 유사한 해결책을 활용하는 기관을 조직하기 위해서

소비자통제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공동의 이익을 가진 기관들이 개별적인 업무요구에 맞는 속도와 규모로 재무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자원을 수집하고 전략을 공유하며, 정부전체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방형 정부를 통한 회계책임 및 혁신 강화

- 연방정부의 지출정보에 대한 데이터 품질 개선:* 연방정부의 지출정보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연방기금책임 및 투명성법안(FFATA: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을 시행하는 관리예산처의 노력의 중심이 되어왔다. 행정부의 낭비근절 캠페인에 따라 대통령의 2011년 6월 13일 행정령 “효율성 있고 효과적이면서 책임 있는 정부의 실현”은 정부 회계책임 및 투명성 위원회(GATB: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를 설립했다. 이 행정령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지출 투명성의 제고, 사기 적발 노력의 전개, 데이터 품질 향상에 대해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권고안은 회복법안 실시 및 회복 법안 투명성 및 책임 위원회(RATB: Recove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2009년 12월 행정부는 데이터가 신속하고 효율적면서 정확하게 보고되도록 하기 위해 각 기관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개방형 정부 지침(M-10-06)을 수립했다. 개방형정부 지침 발행 이후 곧 데이터품질체계가 2월에 발행되었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지출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품질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은 거버넌스 구조, 위험평가절차, 지배적인 원리와 통제, 의사소통, 연방정부지출정보의 관측을 요약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데이터품질계획을 개발했다. 2010년 4월과 8월에 관리예산처(OMB)는 정보품질 개선에 관한 지침을 연방정부기관에 발행했으며, 보조금 및 계약 하위세지급(sub-award) 정보의 보고를 요구했다. 일반인이 일차데이터와 하위지급(sub-award) 데이터 모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방대한 양의 연방정부의 지출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이처럼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연방정부가 연방정부 제도 운영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품질에 대한 기존의 우려와 새롭게 대두되는 우려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관계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권고사항을 습득하여 관리예산처(OMB)와 연방정부기관은 높은 품질의 연방정부 지출정보가 연방정부 제도의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보고모형의 강화:* 연방정부의 “보고 모형”은 연방기관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 기타 필요한 보충정보(MD&A)를 규정하고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범위를 결정짓는다. 재무제표나 필요한 보충정보에 포함되는 것은 또한 감사인의 책임의 성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는 의사결정자와 일반인에 대한 재무보고서의 유용성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재무위험이 가장 중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규정을 강화하여 연방정부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공의 신뢰유지하는 것이다. 정부지출 원가와 달성된 결과에 대한 개선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관리예산처(OMB)는 최고재무책임자위원회(CFO Council)과 협력하여 연방정부자금의

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새로운 지출명세서를 개발했다. 이러한 새로운 명세서가 현재 시범사용되고 있으며, 세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고를 수립할 것이다.

- **해결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의 견실성과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기금(파트너십기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해서 운영되거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이 유익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연방원조사업의 시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서 설립하였다. 기금은 연방, 주, 지방행정부의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유망한 혁신의 시범운영과 평가를 지원한다. 파트너십펀드 시범사업은 (1) 지급 정확도 개선 (2) 행정효율 개선 (3) 서비스 제공 개선 (4) 자격을 갖춘 수급자에 대한 접근장벽 축소와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관리예산처(OMB)는 다른 주, 지방 기관에 혁신의 확장을 알릴 수 있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잠재적인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연방기관, 주와 지방의 행정담당자, 산업 및 기타 관계자들의 협력포럼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은 최소한 비용만큼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섯 개 사업에 대한 자금이 제공되었고 연방기관이 주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실업보험, 메디케이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와 재무부상계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오늘날 정부가 직면한 광범위한 과제는 우리의 재무관리자들이 현상유지에서 벗어나 우리의 재무관리 활동에 대해 보나 높은 투자수익을 창출할 것을 요구한다. 재무관리조직은 2011 회계연도에 정부전체의 부적절한 지급율을 2010 회계연도의 5.29퍼센트에서 4.69퍼센트로 감소시키고 재적발된 부적절한 지급액을 약 80퍼센트 증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나아가 이러한 기관들은 2012년 9월 30일에 30억 달러라는 부동산비용절감 목표를 초과달성할 예정이다. 위에 요약된 조치는 현재 마련된 수단과 역량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투명성과 개방형 정부의 새 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에 낭비가 되는 지출을 제거하고, 운영효율과 정보기술을 향상시키며, 데이터 품질과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적이고 새롭게 대두되는 우선순위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한다.

추가정보

본 재무보고서의 부록은 보고서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정부기관의 명칭과 웹사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본 재무보고서의 세부정보는 이러한 기관의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동 기관 재무제표는 성과, 및 회계책임 보고서와 연간재무보고서를 포함한다. 본 재무보고서와 전기 재무보고서는 재무부, 관리예산처(OMB), 감사원(GAO) 웹사이트에 있다. 관련된 기타 정부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정부 예산
- 재무부 소식지
- 연방정부의 세입, 세출에 관한 월간 재무부명세서
- 미국공공채무에 관한 월간 명세서
- 대통령 경제보고서
-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제도의 신탁기금보고서